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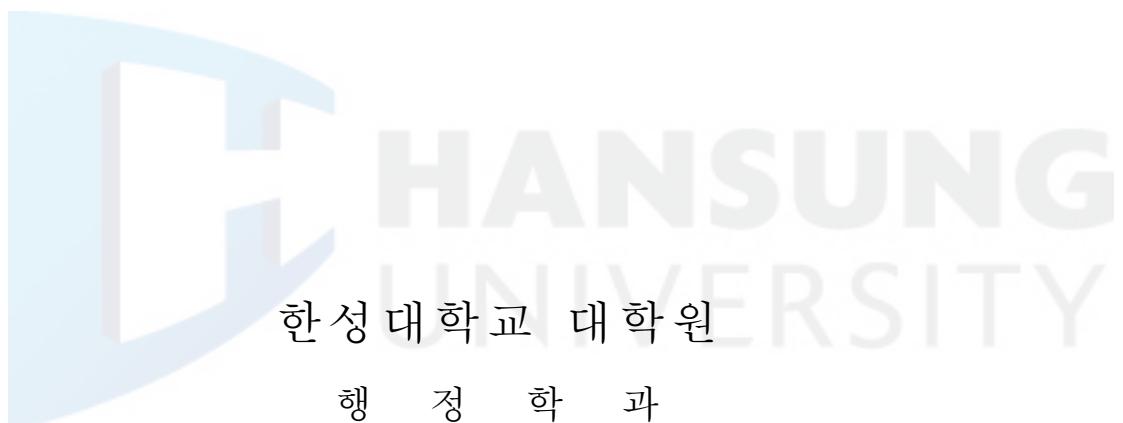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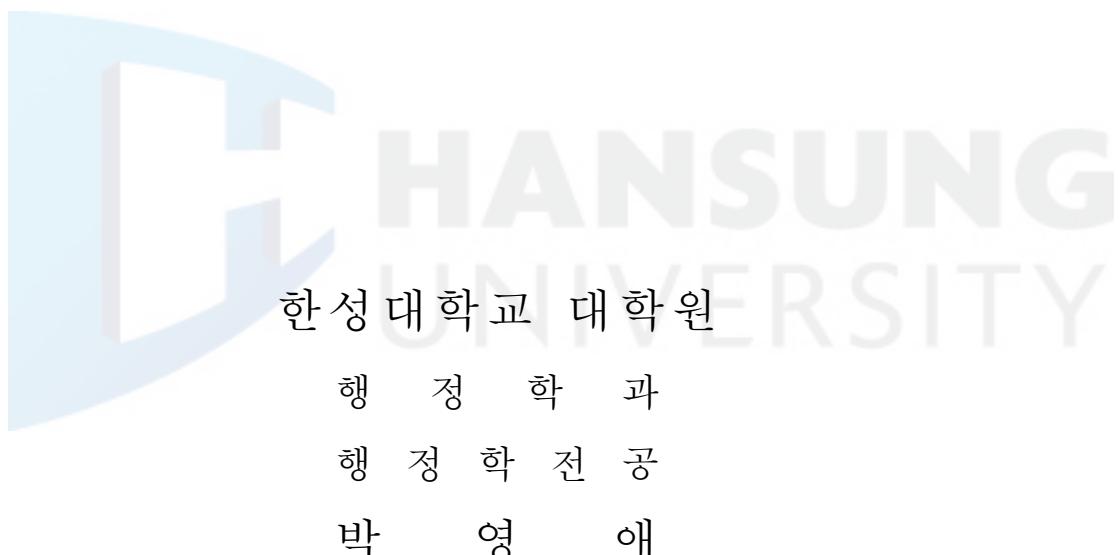
박영애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종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2012년 12월 일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종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위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영애

박 영 애의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영애

본 연구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현실 상황에 빌 맞춰 출산의지에 대한 실행 및 정부정책의 4개 요인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여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설정된 가설들은 설문지 조사와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경우 하위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과 투자 및 무자녀 소신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요인의 경우 핵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양육·교육비 부담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일·가정 양립은 유의

수준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적 요인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결혼가치관이 약화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자녀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점점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출산기피현상이 일어나 저출산의 심각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여성의 개인적 가치관과 출산율에 중요한 요인을 동시에 인식시켜야 할 뚜렷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가부장적 사회통념으로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내재된 가정 분위기는 가임가능여성의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가족정책과 가족수당제도의 전반적인 복지사회실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소나기식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가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지적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연구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출산연령이 35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의 추세이기 때문에 만혼으로 인한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에 관한 의학적 지식교육과 출산

의 문제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녀가치관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부터 기인한 단 기간에 변화되거나 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치관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펼쳤던 캠페인을 이제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취업기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출산 후 직장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기혼자에게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둘째아부터 출산의 연기 및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일과 자녀양육을 위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맞춤식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육 및 교육시설이 민간시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보육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정부의 법적 장치가 조속히 필요한 때이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가장 큰 고민이 자녀양육이다. 정부는 취업기혼자에게 출퇴근 시차제,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한 탄력근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애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현재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지원을 두 자녀 가정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이다. 2명의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현실적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출산의지, 출산장려정책,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6
제 1 절 출산의지의 개념 및 기능	6
1. 출산의지의 개념	6
2. 출산의지의 기능	8
제 2 절 출산 결정 관련 이론	12
제 3 절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
1. 개인적 요인	16
2. 가족적 요인	19
3. 경제적 요인	22
4. 정책적 요인	27
제 4 절 선행연구	34
제 3 장 출산율의 추이와 각국의 출산장려정책	44
제 1 절 한국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출산정책의 변천 과정	44
1. 출산율의 변화 추이	44
2. 출산정책의 변천 과정	47
제 2 절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57
1. 각국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57
2. 각국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85

제 4 장 연구설계	88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88
제 2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설문지 구성	99
제 3 절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101
 제 5 장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104
제 1 절 총괄 분석	104
제 2 절 출산의지의 영향 요인 분석결과	106
제 3 절 가설의 요약과 해석	133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54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54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56
 참고문헌	160
부록 : 설문지	172
ABSTRACT	178

표 목 차

[표 2-1] 한국 장래인구의 추계	11
[표 2-2] 출산 결정 관련 이론	14
[표 2-3] 출산의지의 영향 요인	33
[표 2-4] 출산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물	36
[표 2-5] 출산의지에 관련된 선행 연구물	39
[표 2-6] 출산장려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물	42
[표 3-1] 2001~201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44
[표 3-2]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46
[표 3-3] 가족계획사업 연도별 주요내용(1960~1990)	49
[표 3-4] 새로마지 플랜(2006~2010)의 연차별 투자계획	55
[표 3-5] 출산관련 표어 변화과정	56
[표 3-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58
[표 3-7] 각국의 출산율과 사회적·정책적 원인	59
[표 3-8] 외국의 수당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사례	72
[표 3-9] 외국의 아동수당 관련 정책효과 분석결과	74
[표 3-10]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지원	79
[표 3-11]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통계(2010)	82
[표 3-12] 기초 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	83
[표 4-1] 설문지 구성	100
[표 4-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02
[표 4-3] 자료 분석방법	103
[표 5-1] 응답자의 구성	104
[표 5-2]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6
[표 5-3]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8
[표 5-4]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09
[표 5-5]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0
[표 5-6] 정부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12

[표 5-7] 출산의지 굳히기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결과	114
[표 5-8]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분석	116
[표 5-9]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 간 상관관계분석	117
[표 5-10]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119
[표 5-11]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의 상관관계분석	121
[표 5-1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지 차이의 분산분석	123
[표 5-1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125
[표 5-14]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127
[표 5-1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129
[표 5-16]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책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131
[표 5-17] 가설 1의 분석검증결과	134
[표 5-18] 가설 2의 분석검증결과	135
[표 5-19] 가설 3의 분석검증결과	137
[표 5-20] 가설 4의 분석검증결과	139
[표 5-21] 가설 1~4의 전체적 분석검증결과	141
[표 5-22] 가설 5의 분석검증결과	143
[표 5-23] 가설 6의 분석검증결과	145
[표 5-24] 가설 7의 분석검증결과	147
[표 5-25] 가설 8의 분석검증결과	149

그 림 목 차

<그림 2-1> 결혼에 대한 견해	8
<그림 2-2> 모(母)의 출산연령 추이	10
<그림 2-3> 혼인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	18
<그림 2-4> 가사분담의 대한 견해	21
<그림 2-5>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1980-2009)	27
<그림 3-1>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변화	45
<그림 3-2> 1960년대 인구피라미드	51
<그림 3-3> 1990년대 인구피라미드	52
<그림 3-4> OECD주요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율 추이	60
<그림 3-5>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77
<그림 3-6> 서울평균초혼연령	78
<그림 4-1> 연구모형	8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현재 한국은 인구감소의 원인인 출산율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한 국가의 인구규모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사회의 질서유지에 엄청난 파괴력으로 작용한다. 유럽국가에서 먼저 시작한 저출산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은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엔 합계출산율이 6.0명인 고출산국이었으나 1970년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당시 베이비붐으로 인한 과잉인구가 빈곤의 악순환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에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만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출산억제정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출산억제정책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84년에는 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90년부터 1.6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었다. 2005년 1.08명의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150년에서 200여년이 소요되는 저출산 현상이 한국에선 30년이라는 단기간에 급속한 하락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계속적인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05년에 와서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따른 사회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정부는 미래사회에 대처 할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2006년 6월~2010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는 제 1차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 합계출산율이 1.23명으로 인구 대

체출산율¹⁾ 수준의 절반을 겨우 넘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다시 「제 2차 저출산·기본계획(2011~2015)」에서 는 사업수를 대폭 축소하여 정책 집중도를 개선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혜자 의도를 고려치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분야로 정책이 분산됨으로써 효율적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이다. 이렇듯 한 번 내려간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그 이유는 가족계획을 실시하던 시기와는 아주 다른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달라진 환경여건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와 국가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절대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거나,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실정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현상이며 19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가 3개국, 즉 독일, 덴마크, 핀란드 이었던 것이 이제 60개국이 되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존립과 직결되는 생산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요구된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사전적인 해결방법으로 출산율 회복정책과 사후적인 대응방법으로 일·가정양립 실현정책, 이민정책,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론 출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성만의 권리도 아니고 어느 단 하나의 단일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더러 어떤 요인이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지만 출산을 한 후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최소한 주어진 상태라면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영향요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이런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가임여성의 가치관 및 주변 환경이 출산 의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개

1) 대체 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은 인구를 현상대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2.11명이 이에 해당된다. 대체 출산율 2.11명의 수치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임여성 1인당 2.1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유럽경제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인구보건 복지협회, 2004).

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적인 면과 환경을 심도 있게 다루어 장기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지원만으로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을 내려서 정책의 실효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높은 학력수준과 자아성취욕구 등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덜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다른 시각도 있다. 윤은숙(2011)은 가임가능여성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보다는 정부의 노력이나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율에 대한 위기감을 공감시켜 홍보해 나갈 때 (+)증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현옥(2011)의 연구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으로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지원정책이 크다 하더라도 홍보미비로 인해서 결국 출산의지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인하여 많은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정책에 대한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상선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로 산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현실에 발맞춰 출산의지에 대한 실행 및 정부정책의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다각적인 요인으로 연구 분석을 통해 대책 및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의지의 기능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어 출산의지의 여러 관점에 대하여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 한국과 선진주요국의 정부출산정책을 비교 검토한 후 이에 선진국이 주는 시사점을 찾고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출산의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이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정부정책 요인(4가지 제시된 요인)의 방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논문 구성 체계는 6단계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전개를 위한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논문구성 체계에 관한 서론적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로 출산의지에 관한 개념 및 가능과 출산결정 관련 이론 및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 장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출산 장려정책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후 각국의 정부출산정책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연구 설계로써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변수의 조작화 및 설문지 구성에 대한 내용과 표본설계 및 자료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로써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변수의 개념이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활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총괄분석과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분석검증결과에 이어 가설의 요약과 해석을 각각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해 연구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해석하였다.

제 6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부분으로 이론적 근거로 도출된 결과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첫째,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공청회 자료, 단행본, 연구 보고서, 학회지, 세미나 자료,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 보도 자료, 저서, 그리고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각 요인에 속하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둘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추출한 출산의지의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가설을 설정한 뒤,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보다 특히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셋째, 실증조사를 위한 표본 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1~45세까지의 미·기혼 여성으로 전문직 여성, 어린이집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미취업 여성 8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8월 26일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2까지 2주간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600명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 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748부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736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5점 Likert인 등간 척도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출산의지의 개념 및 기능

1. 출산의지의 개념

본 연구는 출산의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앞서 출산과 의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매우 다양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열거하여 살펴보자 한다.

생명과학과 질병의학 전문용어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출산(childbirth)이란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행위나 그 과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출산이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임신 끝에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현옥(2011)은 출산율(birthrate)이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가임기간(15~49세)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인숙(2005)에 의하면, “출산은 한 개인과 가족의 결정에 의한 사적 행위일 수도 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위의 영향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출산력의 변화는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다.

이삼식 외(2010)는 “출산은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와 제도의 변화,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까지도 포함하여 고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정원(2007)은 “의지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예기 혹은 계획된 미래행동으로서 신념과 태도가 행위로 옮겨질 확률, 즉 특정행위의 수행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에 대한 의사이다.” 또한 “의지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이다. 의지와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지가 강할수록 실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출산의지는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실제 출산율이나 자녀수뿐만 아니라 출산의지를 측정함으로써도 여성들의 출산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비의도적인 출산의 결과를 포함하는 출산율이나 출산 자녀수보다 행위의 예측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더라도 정책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의도적인 행위는 오히려 근접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월성이 존재한다.”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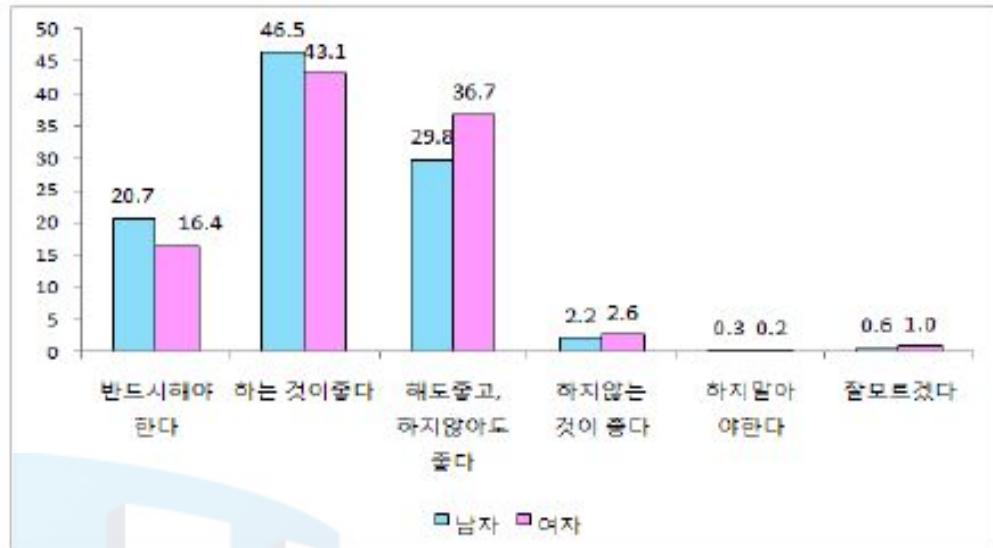
결국 “출산의지는 향후 자녀의 출산 가능성에 관한 의사, 즉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계획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지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계획, 또는 그러한 생각이나 계획을 품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의지와 무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출산의지가 곧 출산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어진다.

이와 같이 의지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설명한다면, 출산의지는 “향후 자녀의 출산에 대한 자신의 의사나 태도, 욕구 또는 생각에 대한 정도”에 의미를 두며. 출산의지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출산의지는 향후 출산 가능성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다.

정책개발 보고서(2010)에 따르면, 출산의지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한국 여성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현상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추세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결혼 선호 가치관이 점점 감소되는 이유 중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다. 이리하여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응답이 제일 높긴 하지만, 또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

적 태도도 36.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아래 <그림 2-1>과 같이 출산의지에 앞서 결혼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그림 2-1> 결혼에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2010), 사회조사.

앞에서 살펴 본 근거에 의해 본 연구에서의 출산의지란 “여성 경제활동으로 인한 만혼 및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2. 출산의지의 기능

1)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

다음은 출산의지에 관련된 기능 중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다음의 것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한유미 외, 2004).

첫째, 일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GFR)은 1년간 총 출생아수를 해당년도 1,000명에 대해 산정한 것으로 가임연령은 보통 만 15~49세가 통용되나 미국은 만 15~44세로 규정하여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 시에는 나라별 가임연령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은 각 연령집단(5세 간격)에 속하는 가임여성 1,000명에 대한 1년간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경우로 나타난다.

셋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를 의미하며,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한 여성의 가임기간인 만 15세에서 49세까지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출산율 개념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넷째,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 rate: RLFR)은 다음 세대에 생물학적 개념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체하는 데 필요한 출산수준을 말한다. 임신하기 전에 사망하는 여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재 선진국에서는 합계출산율을 2.1명, 후진국은 2.5명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지속한다면 인구규모와 구조가 거의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2) 불균형한 사회 구조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는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그림 2-2>에 나타나고 있는 2010년 모(母)의 출산연령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 중 첫째아의 출산평균 연령이 30.09로 초혼 연령 상승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0대 연령층의 출산율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초혼연령층이 25~29세 연령층에서 30대 초반으로써 높아졌으며 여성의 교육증대 및 고용기회의 증가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어 여성의 변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모(母)의 출산 연령 추이



출처: 통계청(2010), 2010 출산통계 잠정결과

아래 [표 2-1]에서 제시된 통계청(2008)의 한국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1983년 2.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불과 20여년 만인 2005년 1.08명으로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출산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총인구는 2009년 4천8백만 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최고점인 4천9백만 명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하지만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여 2035년 4천7백만 명, 2050년 4천2백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80년 3백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단순히 인구의 절대 규모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한국 장래인구의 추계

(단위: 천 명)

연도 Year	총인구 Total Population		
	전체 Total	여성 Female	남성 Male
2009	48,747	24,265	24,481
2010	48,875	24,334	24,540
2015	49,277	24,570	24,707
2020	49,326	24,646	24,680
2025	49,108	24,602	24,506
2030	48,635	24,444	24,190
2035	47,734	24,087	23,647
2040	46,343	23,489	22,854
2045	44,521	22,657	21,864
2050	42,343	21,609	20,731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8), 연구자 재구성, 재인용.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인력의 수급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조남훈 외, 2007; 조명덕, 2010).

특히 단기간에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인구전환은 국민경제의 인력수급 차질과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를 가져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의 제약을 초래하게 되는 반면, 노인 등 사회적 부양계층의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수지의 불균형은 다시 생산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권, 2003; 2006; 이삼식, 2006; 조윤영, 2007; 기획경제부, 2009). 즉 저출산이 야기하는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규모도 급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또한 이는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시장위축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 시기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25~49세의 비중이 감소하여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인력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 추세인 인구 노령화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14%가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super aged society)라고 정의하고 있다(윤은숙, 2007: 11).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2000년에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 2000년에는 7.2%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이 소요된데 비해 한국은 불과 18년이 걸릴 전망이며, 나아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super age society)로 이행하는 데 미국이 16년, 일본이 12년이 걸리는데 비해 한국은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있다(김승권, 2003; 이삼식, 2006; 조명덕, 2008). 이처럼 한국은 고도성장기의 경우에서 처럼 매우 압축적이고 집약적인 인구구조의 고령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출산 결정 관련 이론

출산 결정 관련 이론은 크게 개인적 접근 이론, 가족적 접근 이론, 경제적 접근 이론 및 사회적 접근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인순, 2011). 개인적 접근 이론은 다시 탈물질주의적 가치 이론, 제 2 인구학적 변천이론, 선호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족적 접근 이론은 일·가정 양립 곤란 이론, 양성 평등이론, 여성자율성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접근 이론은 맬더스

(Malthus) 이론, 쿠즈네츠(Kuznets) 이론, 두제르(Duser) 이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들 이론은 총체적으로 보아 소득관련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접근 이론은 또한 차별출산력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젠더 구조 변화 이론, 사회적 출산·육아 이론, 역할양립 이론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산 관련 이론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2-2]이다.



[표 2-2] 출산 결정 관련 이론

구분	이론	초점	분석틀	구성요소	결정요인
개인적 접근 이론	탈물질주의적 가치이론	가족, 개인가치관 변화가 탈물질주의적 수준으로 변화정도에 따라 출산율 결정	-가치관 -자녀가치관	-개인지향 가치관 -자녀관	-가치관이 지향하는 목표 -자아실현정도 -자녀관
	제 2 인구학적 변천이론	사회경제적, 문화적, 세대 간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	- 사회 경제적, 문화 가치관 변화	-연도별 가치관 변화 -개별가치관 -자녀출산율	-가치관 변화 양상 -개별가치관
	선후이론	시장, 가사, 노동간 여성의 선택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	-선택우선순위 - 시장, 가사, 노동 중요도 -자녀가치관	-소비재효용 -가사중요성 -노동중요성 -개인선후도 -외부조건 -생활양식 -행동양식	-개인선후도 -행동양식조건
가족적 접근 근이론	일·가정 양립 곤란	일·가정의 이중부담 정도가 출산 결정에 영향 일·가정 양립 곤란이 클수록 자녀출산 기피	-일·가정 이중부담감 -일·가정 중요성	-노동인식 -결혼인식 -가정, 노동, 성형평성	-가족 내 성형평성 -사회외 성형평성
	양성평등이론	성형평성 수준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출산 결정	-성형평성 -일·가정 양립 비율	-가사부담 시간 -양육부담 시간 -여성 경제 활동참여 -근로시간	-성별 -가사, 양육 부담 형평성 -성별 근로시간
	여성자율성이론	사회, 가정에서의 여성 자율성(주도, 선택 등)이 자녀출산 결정	-성별자율성 -가정주도성	-자기선택권 -선택범위 -자기주도 영역	-자기선택 가능성 -가정 내 자기주도범위

경 제 적 접 근 이 론	소득관련이론	Malthus: (+)의 상관관계이론 -소득증가와 출산율(+)의 관계 Duser: (-)의 상관관계이론 -소득증가와 출산율 (-)의 관계 Kuznets: (+), (-) 경향성이론 -(+)와 (-)의 동시경향성 부유동출산력이론: 가족 내부의 경제구 조에 따라 출산력 결정	-소득의 증가 -출산율의 변화	-소득증가 -결혼시기 -자녀비용 -기호	-소득증가 -결혼시기 -자녀비용 -소득의 증가 -가족내부의 경제적 구조
사 회 적 접 근 이 론	차별출산력 이론	개인의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출산력 차이가 남	-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 - 출산율	-인구사회적 배경(연령, 직업, 교육 거주지, 등) -소득	-직업 -가구소득 -직업의 종류, 수입 등 다양한 요인
	합리적선택 이론 (위험이론)	출산결정에서 위험 요인 수준에 따라 자녀출산 결정	-출산중요성 -출산 위험요인	-취업 -소득생산 -예상 육아 비용 -출산혜택	-취업복귀 가능성 -예상육아비용
				-사회제도 -개인적제도 -가족제도 -성역할과 구조 -출산관련 제도	-사회경제적 제도 -젠더인식과 구조 -출산제도
	젠더와 제도	개인적, 사회적, 가 족적 제도가 젠더 구조 변화와 출산의 사 결정	-제도와 인식 -젠더구조 (역할)		
	사회적 출산, 육아 이론	공적, 사회적 출산, 육아부담, 개입이 개인의 출산의사결 정에 영향	- 출산, 육아 부담 -출산, 육아	-출산관련 서비스 -육아제도	-출산관련 제도 -개입에 대한 인식

	취업조건, 보육시설 환경 등 취업, 가정생활 가능한 조건의 자녀출산 결정	-취업조건 -육아조건 -가정생활 조건	-근무조건 -직종 -보육시설 환경 -보육서비스 -사가보조 조건	-직종 -보육시설
--	--	-------------------------------	--	--------------

출처: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6.

이러한 출산 관련 이론들에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3절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는 1980년대부터 급격히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사회와 제도의 특성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어 출산계획, 출산의도, 그리고 출산의지 등에 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밝히고자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던 이론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요인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 개인적 요인

가치관에 대한 사회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Roanld Inglehart(1997: 109-120)는 예전의 물질적 가치관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과정을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이 이론은 근대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소비와 안전이 강조되지만 탈근대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는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근대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삶의 가치차원이 실존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신체적 안녕과 사회질서, 안정, 경제성장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탈근대화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행복감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마미정, 2007 :재인용).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사회학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사회 인구학적 행위의 변화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선호에 대한 만족감, 전통적인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의 신장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2)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Inglehart의 논의는 탈근대주의 사회에 있어서 출산력 선호성(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과 연관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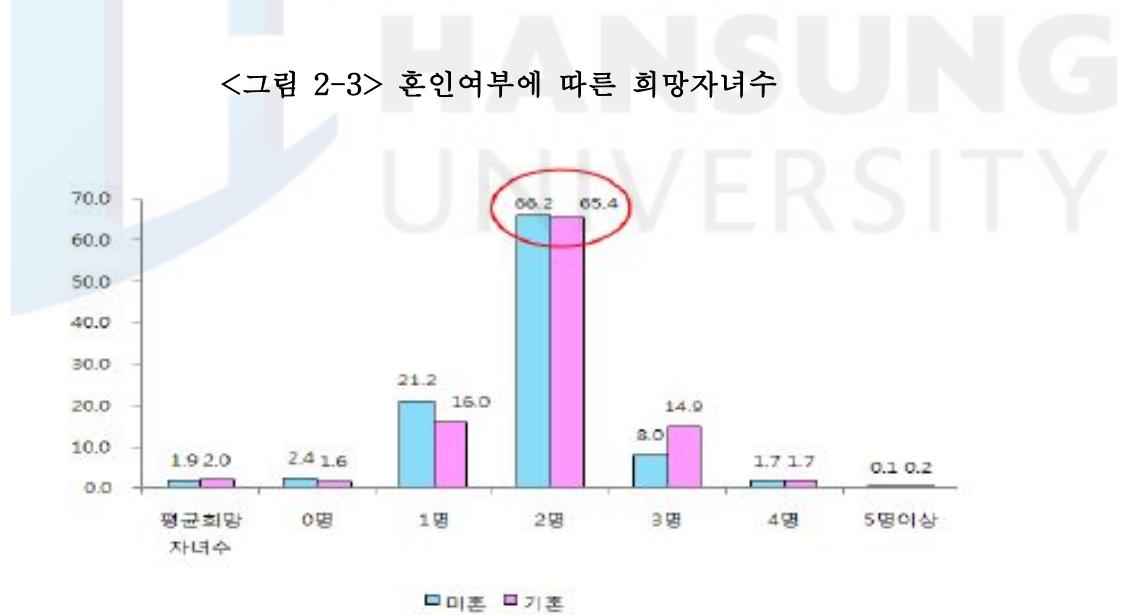
여기서 탈근대주의의 시기는 근대주의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로 경제적 안정성, 매우 높은 생활수준 민주적인 정치와 기회의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탈근대주의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대체하는 정치, 산업, 종교, 가족 그리고 성역 할 등 국가나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들로서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가족생활에 유발하는 변화 중 하나가 가족규범의 약화와 만혼화 및 출산기피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섭 외, 2005: 114).

3)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등으로 초점을 맞추어 출산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지만 가치관 변화는 언제나 물질적 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 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만혼이나 비혼 및 출산기피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만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다(김두섭 외, 2005; 정성호, 2009: 29-45).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통계에 의하면,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간 괴리문제에 관하여 조사한 아래 <그림 2-3>이다. 서울시 만 25-44세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96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까운 수치이다. 기혼·미혼을 통틀어 희망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명, 3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희망자녀수는 여전히 2명이 지배적이고 기혼이 경우 3명 이상 다자녀 희망비율도 14.9%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림 2-3> 혼인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0), 혼인여부에 따른 희망자녀수.

Schultz(1982)는 자녀의 수에 대한 잠재가격은 자녀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투자적 가치를 현재의 소득향상보다 미래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투자효과는 개인이나 현대 세대를 벗어나 사회나 미래 세대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교육투자는 개인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결혼관 및 가족이념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족의 가능과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던 견해에서 부부간의 성이나 상호성장 기회로서의 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다. 개인의 의식은 집단주의 의식에서 개인주의 의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결혼은 점차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바뀌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한다(방은령·신효영, 2006: 326).

이러한 결혼가치관이나 자녀가치관에 따른 출산의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가족적 요인

가족형성에 대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개념과 관계형성의 가치체계나 규범 등의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많은 연구들이 교육을 지적하면서 대중교육이 결과적으로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교육이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는 것이다²⁾(Caldwell, 1982: 김한곤,

1993: 25).

가부장적 유교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의 양성 평등(gender equality) 실현 정도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게 낮게 나타난다. 이 양성 평등 실현 정도는 개인, 가족의 생애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이삼식 외, 2010).

기혼여성이 취업을 위해 출산을 조절하거나 또는 출산을 위해 취업을 조절하는 등의 복합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과 양육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박수미, 2002: 145-174; Rindfuss & Brewster, 1996: 258-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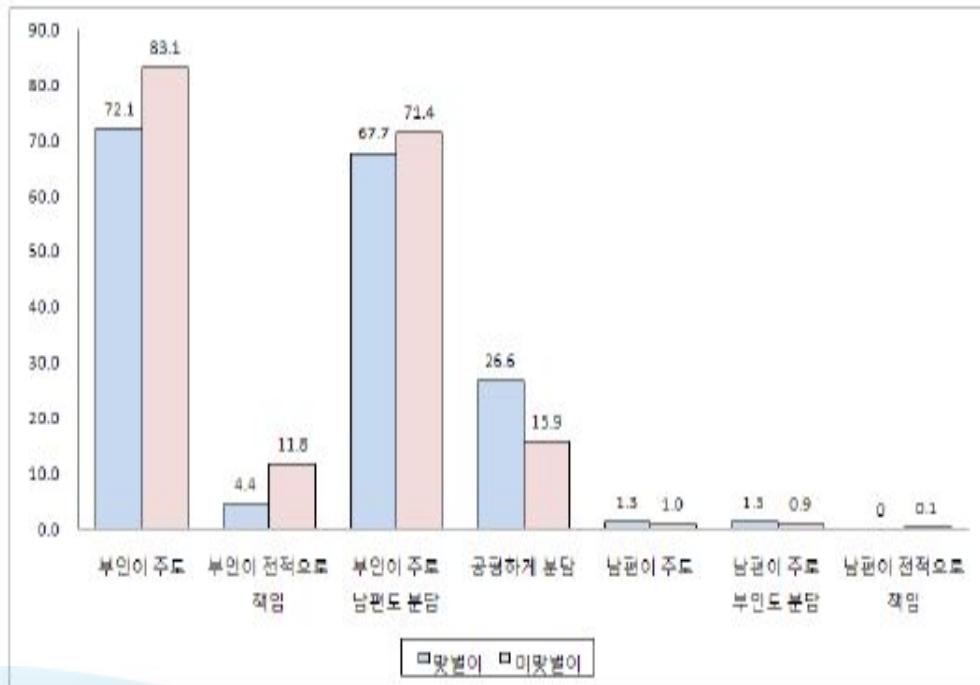
현대사회의 출산율은 여성이 공식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나 경제 개발기회와 이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능력의 일치여부에 의해 좌우된다(Bonodi, 2008: 64-78)

혹쉴드(Hochschild, 1989)는 남성의 가사의무 정도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자녀 양육과 일과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 명명하였다.

아래 <그림2-4>의 통계청(2008)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가사에 대한 책임이 여성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아 가정 내 성 평등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부인이 주도해서 가사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72.1%, 미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83.1%로 나타나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벌이 가정 26.6%로 미맞벌이 가정 15.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2) 교육이 출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농업사회에서는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로 부가 흘렀으나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흐름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흐르게 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이 생산자가 아니라 폐부양자가 되며 자녀를 부양하는데 더 많은 교육이 요구되며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는 노후보장을 자식들에 의존하는 가족중심적인 노후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져다주었던 농경사회와는 다른 점이다(Caldwell, 1982).

<그림 2-4> 가사분담의 대한 견해



출처: 통계청(2008), KOSIS 자료.

2) 새로운 가족형태(탈가족화3))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기준의 인구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교육·의료·복지서비스·노동 및 산업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자녀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부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비중을 늘려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로 인한 다양한 인구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본다.

3) 탈가족화는 가족해체 등을 포함한 조금 더 포괄적인 반가족주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반가족주의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해체란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적 자원이 결손 되거나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 대립이 생겨서 그 결과 가족으로서의 통일이나 조화가 파괴되어 가정생활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가족구성원의 생활욕 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혼, 가출, 별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http://100.never.com>).

저출산 사회는 노인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과 노인 노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외국으로부터 노동력의 수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학생인구도 덩달아 감소하게 될 것이며 과잉 투자된 학교시설과 교원의 구조조정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형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많은 변화가 온다(Caldwell, 1982; 김한곤, 1993: 25).

이와 같이 가족적 요인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가부장적 제도에 의한 부담으로 하여금 출산의지가 점점 더 약화되어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족의 도움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여성의 출산의지를 굳히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제도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감소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양육에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요인이 내재된 가정 분위기는 가임가능여성의 결혼기피 현상과 맞물려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취업과 출산수준 등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할 갈등

일·가정 양립 곤란이론(Work-family incompatibility theory)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일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인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이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쳐 출

산기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일과 가정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약 4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둘 이상의 역할 수행을 동시에 요구 받게 될 때 하나의 역할에 응하는 것이 다른 역할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山口一男, 2008; 정성호, 2009: 29-45). 일·가정 양립 곤란 이론을 여성의 일에 대한 선택 갈등과 추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하여 여성은 소(小)자녀를 희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급속하게 향상되면서 젊은 세대 여성들은 직업에 대한 높은 헌신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거 세대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결혼과 출신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손승영 외, 2005; 이연주, 2005).

역할 갈등에 대한 정의에 따라 일과 가정의 갈등을 단순히 직장 내에서의 역할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정에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긴장과 갈등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일·가정 갈등의 원인을 시간근거갈등, 긴장근거갈등, 행동근거갈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정성호, 2009: 1-22).

여기서 먼저 시간근거갈등(Time-based Conflict)은 한 역할과 관련된 시간 압력으로 인하여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소요와 관련된 갈등이다. 다음으로 긴장근거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한 역할에서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피로가 다른 역할의 참여를 간섭 혹은 방해할 때 생기는 갈등으로, 불안과 긴장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긴장근거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근거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개인의 행동과 조직에서 요구 혹은 기대하는 행동이 상호 불일치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많은 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모순된 행동 및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각 영역에 대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처한 개인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여성에게 일과 어머니 역할의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여성은 상근 일에서 벗어나 파

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전업주부를 선택하여 일의 역할을 줄여 역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 다른 일부 여성은 소(小)자녀의 출산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줄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2) 경제적 효용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대체효과, 즉 기회비용 증대와 관련된 출산율 저하로 소득효과, 다시 말해 자녀를 재화로 간주함으로 인한 출산율 상승을 지배하게 되어 출산수준을 낮추게 된다(마미정, 2008)⁴⁾.

민서(Mincer, 1974: 2)에 의하면, 기혼부인의 소득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를 갖는 반면 남편의 소득은 소득효과만을 갖기 때문에 기혼부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고, 남편의 소득증대가 발생되면 대체효과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은 동태적인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고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 1974: 재인용)⁵⁾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즉 라인벤스타인은 ‘한계효용이론’에서 부부가 추가적인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비효용을 균형화 시키는 수준에서 바람직한 자녀수가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한 가구의 출산력 수준은 주어진 가구

4) '역할양립이론(role compatibility theory)'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감소시키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곧 여성의 취업 자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직종이나 근무환경 등과 같은 취업조건이 출산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방승희 · 김사현, 2008).

5)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dsm 자녀의 경제적 효용을 소비효용(consumption utility), 생산제효용/utility as a productive agent), 노후보장효용/utility as a source of security) 등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소비효용은 자녀를 소비제로 간주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 자체가 부모에게 효용가치를 주는 직접 효용을 뜻하고, 생산제효용은 자녀를 생산제로 여겨 가내노동의 수행과 같은 자녀의 역할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나 노동의 간접효용을 뜻하며, 노후보장효용은 자녀를 노후의 생활수단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함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보장원천으로서의 효용을 뜻한다(김옥암, 2000). 또한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투입되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의 직접비용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상실되는 기혼 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인 간접비용으로 구분했다(민주노동연구소, 2006).

소득의 제약 하에서 부모와 자녀의 소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Becker(1960)와 Leibenstein(1974)의 모델¹에 기초한다(d'Addio, 2005). 자녀에 수반하는 각종 수당⁶과 세금 감면은 자녀 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출산과 가구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모델에서는 자녀지출비용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⁷.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종사상 지위 이외에도 남편의 종사상 지위 또한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소득과 출산력간의 상관관계 이론과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이다. 먼저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이론은 맬더스(Malthus, 1963)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 1974)이다. 베커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해서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박숙자, 2003: 123).

만약 소득과 출산이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다(김영순, 2009: 8).

3) 인구 전환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억제시킨다는 음의 상관관계 이론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강력하게 주장되었으며, 이는 인구전환이론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 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

6) 주어진 소득수준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는 개인의 선호와 자녀 지출 비용사이의 함수이다. 이 모델은 자녀는 특별한 종류의 자본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7) 가정의 “소득효과(자녀 수당으로 인해 높아진 가구 소득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도가 대체효과 “소득이 높으면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 자녀수를 줄이게 될 것”보다 큰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d'Addio, 2005).

올(Coale)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을 증가시키는 의욕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김승권, 2003: 6-21).

뮬러(Muller, 1966: 99)와 히어(Heer, 1996)등은 전통적 농업중심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소자녀관 형성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인구 감소

합계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유발, 안정적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지난 50년 간 OECD 국가들의 노동인구는 50년 전 당시보다 76%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50년간은 현재 수준에 대비하여 4%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Joelle E. Sleebo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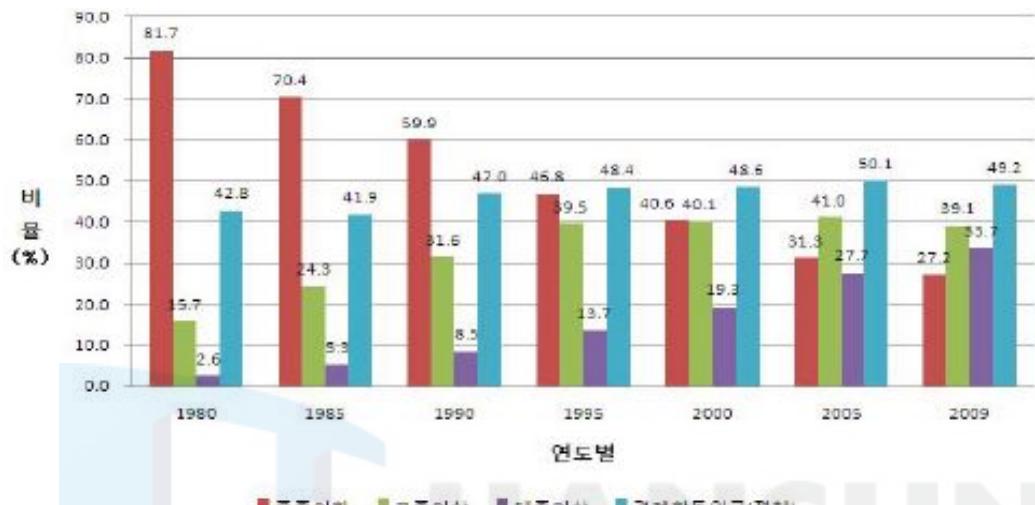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이 많아지고, 일자리를 구한 여성의 직장 내에서 승진의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할 때나 취업 중 임신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승진을 할 때 가정의 신념체계에 따른 여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를 구할 때 여성은 가정 일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구조화된 관념으로 인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가 고용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한 여성의 경우는 임신을 하면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가정성의 신념으로 인해 다시 퇴직의 유인에 처하게 된다(김민주, 2010: 105-128).

또 승진 시에도 남성중심의 모임이나, 고위 간부가 되면 많은 스케줄과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육아나 가사 일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성은 보이지 않는 차별(glass ceiling)이나 불리함

(maternal wall)을 겪는다(Williams, 2000: 64-84).

아래 <그림 2-5>를 살펴보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 도표화이다.

<그림 2-5>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1980-2009)



출처: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재구성.

이러한 경제적 요인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일과 가정에서의 육아담당은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짐을 알 수 있다.

4. 정책적 요인

사회문제로 야기될 개인·사회·국가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 고령화 추세

심화된 저출산 추세는 결국 현재의 고령화 문제를 훨씬 능가하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고령화의 근본원인은 크게 보면 평균 수명연장과 출산율 저하이다. 이중 수명연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진보에 따라 불가피한,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저출산 추세에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에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이삼식 외, 2005). 첫째,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상승과 출산기피이다. 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3). 현대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같이 가족형성에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전적으로 결부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 가족형성여부와 결혼시기를 결정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사고방식에서의 결혼 제도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자녀관도 변화하고 있다.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강해지면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는 대를 잇거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도구적 가치로써 자녀의 역할이 줄어들어 전통사회에서 당연시 되었던 자녀출산이 선택이 문제로 바뀌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둘째, 자녀양육을 위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다.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의 확산과 교육수준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학벌위주의 서열화, 대학입시제도와 공교육 간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족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양적보다 질적으로 향상을 추구하고 소자녀관을 가지고 자녀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

해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커진다(박숙자, 2003: 123).

셋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 증대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짐에 따라 여성들은 남성과 대등한 관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그들과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여성의 첫째 자녀출산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직장경력에 대한 기회비용⁸⁾ 때문에 여성의 고등 교육을 받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교육수준 향상이 직·간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 및 태도를 수용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력 저하는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출산장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주, 2003).

넷째,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 불평등이다. 한국은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남성이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가중되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태도와 역할은 변화하지 않아 양성 불평등 요인으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대두되어 여성들은 출산기피 및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과 연계시키고 있다(이삼식 외, 2008 :재인용).

다섯째, 여성의 교육수준 확대이다. 사회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급여 액수와 미흡한 서비스 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낮게 하는 원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8) 기회비용의 주된 내용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여성은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관련된 비용이다.

자녀 양육비가 고비용으로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데, 월 10만 원 수준의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육아휴직동안 받는 월 50만원은 여성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존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취약 계층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보편적 복지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저소득과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삼식 외, 2005).

여섯째, 자녀양육비 지원이다.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느 기간 동안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실제 양육기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그리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하는 동안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어도 다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의 지원과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의 자격이 유지되어 휴직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직장여성들의 출산율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이삼식 외, 2005).

일곱째,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이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으나 여성의 성역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부장적 사회가 출산을 막는 벽이 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의 주 책임자로 인식되는 등 부부의 역할구조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다보니 취업여성들에게 자녀출산은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어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의 현재의 문제를 겨냥했지만 이제 고령화 문제만큼 심각해진 저출산에 대해 사회현상의 변화에 관한 대비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

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국가적 책임으로 본다.

2) 사회복지정책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층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은 늘어나 국민연금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구를 부양할 젊은층의 감소는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노인의료비 등 사회복지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대한 증가는 세금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결국은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이삼식 외, 2005). 그렇지만 인구고령화 전개과정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국가들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고, 북유럽국가, 불어권 국가 등은 동시에 인구 고령화 속도가 완화 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소극적이거나 성과가 크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추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인구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 또는 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출산·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가족·사회적으로 성분업적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조남훈 외, 2007).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이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3) 출산정책

한국의 경우 1960년대에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여 30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6.0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하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너무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

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으며 보육료지원정책엔 신생아로부터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수혜자들이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정책을 위한 정책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지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지한다면 출산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김형준, 2008: 111-134).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이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197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발생하자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문제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1.8~1.9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프랑스의 출산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형준, 2008). 이처럼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2005년 4월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여 출산력 증대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개인, 사회, 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정책 중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출산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독일의 가족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 투자에 비하여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와 같은 지원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미란, 2008). 일본정부의 저출산 정책인 엔젤플랜(1994), 신 엔젤플랜(1999) 등 다양한 정책도 일본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 난 저출산 현상은 개선될 가능성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윤소영, 2005: 159-166).

아래 [표 2-3]은 앞에서 다룬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결정되어질 수 있는 영향요인을 논자의 연구에 의해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 2-3] 출산의지의 영향요인

구분	영향요인
개인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가 탈물질주의적 변화에 따라 출산율 영향 세대 간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
가족적 요인	취업여성의 이중부담정도에 따라 출산율 영향 취업여성의 양립곤란이 클수록 출산기피 현상에 이어 출산율 영향 성형평성 수준에 따라 출산율 영향 여성 자율성에 따라 출산율 영향
경제적 요인	개인의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출산율 영향 출산결정의 위험수준에 따라 출산율 영향 젠더 구조 변화에 따라 출산율 영향 보육시설 환경 등에 의한 취업조건에 따라 출산율 영향
정책적 요인	현재 심화된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출산율 영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따라 출산율 영향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서 출산율 영향 보육료 서비스지원 정책에 따라 출산율 영향

연구자 내용 추출하여 재정리.

이상의 논의에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결정되어질 수 있는 핵심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출산의지에 대한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기간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외국의 사례 중 스웨덴의 경우 정부지원에 따라 출산율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향후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 4 절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연구의 성과가 컸지만 국내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지만 여러 관련연구자들이 저출산에 관한 연구를 해 왔고 여전히 지금도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관련된 선행연구(김두섭, 2007:67-95, 전희경, 2010: 안윤숙· 이상호, 2010: 227-258), 출산율에 관련된 연구(김사현, 2009: 113-137; 유계숙, 2009: 169-189; 김홍배 외, 2008: 133-147; 신효영·방은령, 2008: 123-136, 오유진·박성준, 2010: 91-112; 정성호, 2009: 1-22, 채구묵, 2005: 337-361),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

1. 출산과 출산의지에 관한 선행 연구

먼저 출산과 출산의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20대와 3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인숙(2005: 67-90)은 “저 출산 요인분석과 사회 복지적 합의”를 통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현재 자녀수와 향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 복지적 합의를 찾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지역, 결혼기간, 첫 자녀 성별을 선정하고, 사회경

제적 요인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여부를 택하였으며, 자녀가 치관 요인으로 결혼의 필요성, 아들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부부관계 불평등성,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 욕구를 분석하였다.

가임 연령의 취업, 비취업 여성을 표본으로 한 공선영(2006: 119-149)은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의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이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저하와 관계있음을 강조한다. 인구학적 변수는 초혼 연령과 2000년 아들 유무이고, 사회경제적 변수는 교육수준, 동산 및 부동산, 월평균소득, 직업종사자 지위, 일하는 이유와 일하지 않는 이유로, 이를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지원과 사적 서비스지원을 구분한 이정원(2006)은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 경제적자원은 가구소득, 본인소득, 학력 수준으로, 공적 서비스 지원은 휴가제도 이용정도, 사적 서비스지원은 가정의 육아분담경향, 가사 분담경향, 사적 보육조력 지원정도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이며 이미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이 후속 자녀출산을 하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요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미란(2007)은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가치관 요인, 결혼가치관 요인, 정책지원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안정성, 고용양성평등으로 하고, 자녀에 따른 비용으로 가족가치관 요인은 가족공동체 의식, 핵가족화, 탈 가족화로 선택하였다. 결혼가치관 요인은 가족형성, 결혼 필요성, 외로움, 결혼제도, 결혼책임, 부모 효도, 자녀소유, 노후의지, 자아성취, 결혼구속, 사회책임으로 선정하였고, 정책지원 요인은 사회보험·체제, 출산의료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조성으로 결정하여 각 요인이 출산의지와 기대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첫 자녀를 출산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마미정(2007)은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에서 자녀의 양육 지원특성과 가계·경제적 특성, 자녀가치관 요인이 둘째 자녀 출산의지와 출산기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신윤정(2008: 103-134)은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출산의향 및 기대 자녀수에 대해 미치는 요인별 영향을 전화설문을 통해 고찰하였는데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가구별 자녀의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부담수준이 자녀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육·교육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소득수준, 지역, 학력, 취업여부, 양육자녀 수를 선정하였고, 경제적 요인으로 보육·교육비 지출수준, 보육·교육비 부담수준, 보육·교육비 절감, 교육비 절감, 향후 보육·교육비 지출 절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생을 제외한 미혼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효영(2009)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관 요인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은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월 소득이고, 가치관 요인은 결혼관, 자녀관, 성 역할관이며, 주관적사회적 규범으로는 결혼에 대한 사회규범과 자녀에 대한 사회규범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이외에 출산과 출산의지들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출산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물

연구자	연구제목	주요연구결과
김승권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대응방안	○ 결혼·출산·양육의 비친화적 사회제도 및 문화, 양성불평등 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수준, 아동양육과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흡,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 양성불평등적

		및 남성중심의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물이해 및 정책부재, 과도한 임신 소모 및 불임 등의 요인
김두섭 (200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 요인 중 결혼이나 가치관이 출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으며, 양육지원정책의 사용 유무도 영향을 미침.
마미경 (2007)	서울·경기지역 맞벌이부부 출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부부의 둘째자녀에 대한 의도요인은 가치관이며 기피요인은 양육지원요인으로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의 인구학적 특성은 서로 유기적 관계
조남훈 외 (2007)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제 효율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초혼연령의 증가,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 미혼인구의 증가로 인한 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주거 및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 불임 등의 의한 영향 ○ 문화적 요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성 평등에 관한 영향
이삼식 (2007)	저출산·고령화 사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만혼, 고령출산, 결혼관 및 자녀관의 약화, 성분업적 역할관에 의한 영향 ○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자녀사교육비), 경제적 환경변화(IMF외환위기, 남편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 무주택 등), 일-가정 양립곤란(남편의 가사시간, 성분업적 역할강화, 부부간 가사노동 불공평 등), 노동시장(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기회비용상승 등), 출산 건강수준(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경험)에 의한 영향
박수미 (2008)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둘째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가족계획, 첫 자녀성별이며, 취업여성의 경우는 성형평성 요인이 영향을 미침
송다영 (2008)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공동양육 부담이 사회와 공유 되어야 함

	현황과 과제	
이소영 (2008)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취업여성은 일보다는 가정 만족도가 높으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출산의지 경향이 높음
山口一男 (2008)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노동력과 참여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커짐
조남훈 외 (2007)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요인: 초혼연령의 증가,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 미혼인구의 증가로 인한 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주거 및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 불임 등의 의한 영향 ○ 문화적 요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성 평등에 관한 영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학적 원인: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결혼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줄이는 경향에 의한 영향 ○ 사회경제적 요인: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육아지원기능 미흡,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요인 ○ 가치관의 변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이라는 의식의 증가로 인한 영향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2-5] 출산의지에 관련된 선행연구물

연구자	연구제목	측정변수	분석방법	연구대상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의 연구	초혼연령, 2000년 아들 유무 교육수준, 동산 및 부동산, 월평균소득, 직업종사자의 지위, 일하는(일하지 않는)이유	빈도분석,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	기혼여성 (15~49세)
이정원 (2006)	유자녀 기혼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가구소득, 본인소득, 학력수준 휴가제도이용정도 육아분담경향, 가사분담경향 사적보육조력 자원정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유자녀 기혼 취업여성 (20~39세)
이미란 (2007)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안정성, 고용양성평등, 자녀에 따른 비용 공동체 의식, 핵가족화, 탈가족화 가족형성, 결혼필요성, 외로움, 결혼제도, 결혼책임, 부모효도, 자녀소유, 노후의지, 자아성취, 결혼구속, 사회책임 사회보험 체계, 출산의료비, 보육서비스, 사회문화조성,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t검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미혼여성, 기혼여성
박길진 (2007)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별, 결혼유무, 직장유형, 자녀유무, 급여수준 경제적 부담감, 육체적 부담감, 정서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진제도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회귀분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남녀직장인 (20~50대)
신윤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연령, 소득수준, 지역, 취업여부, 학력, 양육자녀수 보육·교육비지출수준,	로짓모형 분석	기혼여성 (25~39세)

	영향 분석	보육·교육비부담수준, 보육·교육비절감, 향후보육·교육 지출 절감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령, 학력, 직업, 거주 지역, 월소득 결혼관, 자녀관, 성 역할관 결혼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	빈도분석, 내용분석	대학생 제외 미혼자 (만 19세 이 상) 기혼자 (만 40세 이 하)
이연주 김재일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연령, 교육수준, 결혼연수 가계소득, 자녀양육비, 일·가정 양립의 곤란 자녀가치관, 성역할 태도, 일·가정 선호도, 이상 자녀수 인지도, 제도홍보, 이상 자녀수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ANOVA	기혼여성 (만 25세~40 대)
마미정 (2009)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 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연령, 학력, 출생순위, 동기유형, 주거지, 주거유형, 종교, 결혼기간, 혼인상태, 자녀출산연령, 자녀성별, 자녀양육형태, 자녀양육만족도,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남편의 자녀양육 협력도, 남편의 가사업무 협력도 직업, 월평균소득, 아내수입 기여도 개인적가치관, 정서적 가치관, 사회적 가치관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첫 자녀 출산한 맞벌이 부부

출처: 이현옥(2011). 한국여성의 출산형태 결정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해당부분 추출하여 연구자 재구성.

2. 출산장려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

이어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한 박길진(2007)은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남녀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 4군, 즉 공무원, 일반기업체, 은행원, 자영업의 기혼여성(만25~40대)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연주·김재익(2009)은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설문을 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군별 기혼여성들이 선호하는 효과적인 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우선순위를 통한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욕구를 고찰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연수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자녀양육비,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으로, 가치관 요인으로는 자녀가치관, 성역할 태도, 일-가정 선호도, 이상 자녀수를 설정했으며, 출산장려정책 요인은 인지도, 제도홍보, 홍보선호 및 효과적인 정책 등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하여 연구한 신효영(2009)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 해당자들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수혜대상자들은 체감효과가 낮다고 설명했다. 즉 출산 축하금 외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수혜자 또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그 이유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이 미흡하며 또한 수혜대상자, 행정실무자, 전문지원이 모두 경제적 지원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환경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관련된 기존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본 [표 2-6]은 아래와 같다.

[표 2-6] 출산장려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물

연구자 (시기)	연구제목	영향요인	분석결과
윤경애 (2006)	한국·독일· 스웨덴의 여성·가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시민권·노동 권의 보장 정도 ▶ 유급노동지원정도 ▶ 보육지원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일하는 어머니를 지원하는 국가가 가족 내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노동 을 지원하는 국가보다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음
신윤경 (200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비 ▶ 교육비 ▶ 경제활동여건 ▶ 남아자녀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자녀의 출산, 현재자녀의 출산에 는 보육·보육비지출과 양육까지의 총 소요 비용이 고려됨.
김사현 (2009)	인구구조변화와 장래노동시장의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전성 ▶ 근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임금, 고용불안, 미숙련은 출산과 양육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정 규 여성의 출산기피요인으로 작용함.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가치관 ▶ 정책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미혼 남여 모두 결혼관, 자녀관에 긍정적이며, 현재 시행중인 출산 장 려정책에는 조사대상 모두가 체감효 과 낮음.
조명덕 (2010)	저출산 교령사회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을 ▶ 실질GDP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은 경제 성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 질 GDP,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교육비 부담, 초혼영령 상승, 여성 실업율 상 승과 부의 관계

기존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연구자 재구성.

이상의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여성의 출산의지는 정부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출산의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하고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 3 장 출산율의 추이와 각국의 출산장려정책

제 1 절 한국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출산정책의 변천 과정

1. 출산율의 변화 추이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는 아래 [표 3-1]에 나타나 있다.

[표 3-1] 2001~201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
서울특별시	1.10	1.00	1.00	1.00	0.92	0.97	1.06	1.01	0.96	1.02
부산광역시	1.09	0.97	0.98	0.95	0.88	0.91	1.02	0.98	0.94	1.04
대구광역시	1.21	1.07	1.11	1.08	1.00	1.01	1.13	1.07	1.03	1.11
인천광역시	1.31	1.17	1.20	1.15	1.07	1.11	1.25	1.19	1.14	1.21
광주광역시	1.41	1.25	1.27	1.19	1.10	1.14	1.26	1.20	1.14	1.22
대전광역시	1.32	1.20	1.21	1.17	1.10	1.15	1.27	1.22	1.16	1.21
울산광역시	1.41	1.23	1.27	1.23	1.18	1.24	1.40	1.34	1.31	1.37
경기도	1.42	1.29	1.31	1.27	1.17	1.23	1.35	1.29	1.23	1.31
강원도	1.40	1.30	1.27	1.25	1.18	1.19	1.35	1.25	1.25	1.31
충청북도	1.41	1.28	1.26	1.26	1.19	1.22	1.39	1.32	1.32	1.40
충청남도	1.52	1.35	1.35	1.35	1.26	1.35	1.50	1.44	1.41	1.48
전라북도	1.41	1.26	1.26	1.23	1.18	1.20	1.37	1.31	1.28	1.37
전라남도	1.55	1.38	1.38	1.35	1.28	1.33	1.53	1.45	1.45	1.54
경상북도	1.39	1.22	1.24	1.19	1.17	1.20	1.36	1.31	1.27	1.38
경상남도	1.41	1.26	1.28	1.26	1.18	1.25	1.43	1.37	1.32	1.41
제주특별자치도	1.55	1.38	1.42	1.34	1.30	1.36	1.48	1.39	1.38	1.46

출처: 통계청(2011).

201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⁹⁾은 1.24로 세계최저 수준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로 분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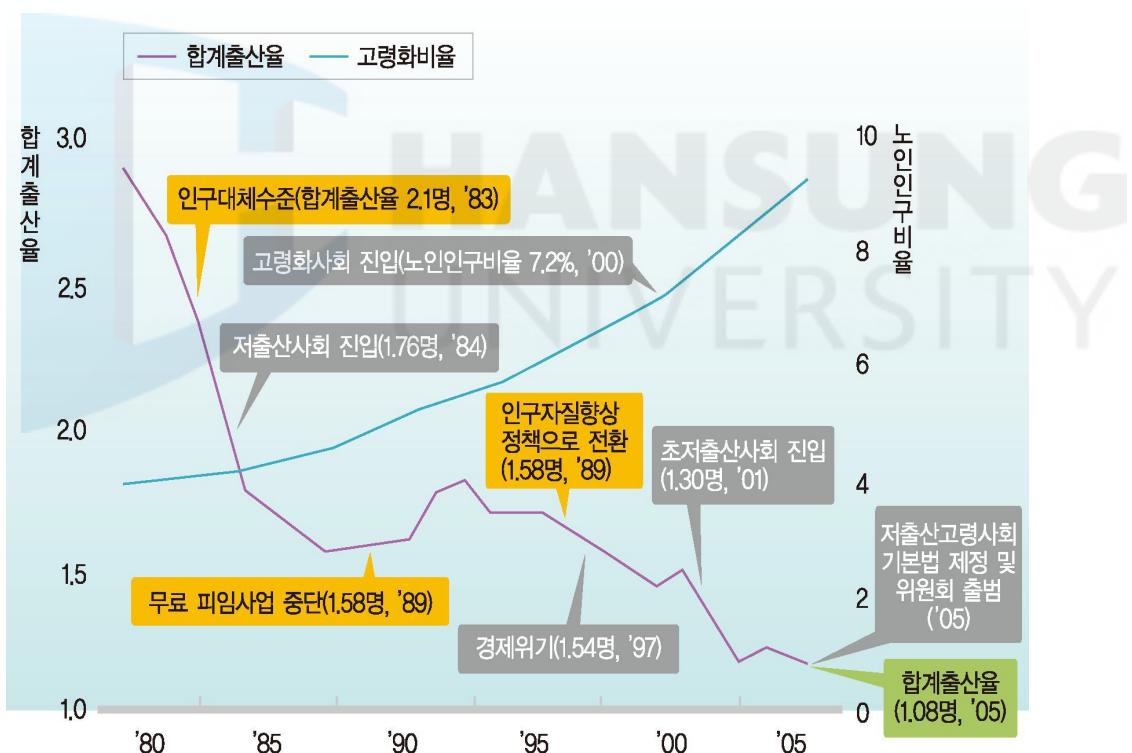
9) 합계출산률(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성의 임신기간(15~49세)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며, 대체출산률(Replacement level)은 출산하는데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출산률이며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를 가리킨다. 또한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인구성장의 정지년도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인구변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수치이다.

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과 2002년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200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 1.08명까지 이르렀다가 2006년 증가세로 반전한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이 대체출산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였고,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너무 낮아진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주력하고 있다(조병구 외, 2007).

아래 <그림 3-1>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추이와 관련 정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 변화



출처 :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관)」.

장영식 외(2009)는 이와 같이 낮은 출산수준은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젊은 연령층과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노령층의 비율은 크게 높아져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하여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초 정부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획되는 단계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이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높은 출산율이 경제에 악 영향을 미쳐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아래 [표 3-2]와 같이 변화하였다. 1960년대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에는 인구의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08명에 이르렀으며, 1990년도에는 1.59명, 2001년부터 1.3명 이하의 ‘초저출산국’¹⁰⁾에 진입하게 되었다.

[표 3-2]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천명, 명)

연도	1960	1970	1975	1980	1983	1990	1995	2001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출생아 수	792	1,007	875	865	778	659	721	555	492	435	448	493	466	445
합계출산율	6.0	4.53	3.47	2.83	1.59	1.65	1.63	1.30	1.17	1.08	1.12	1.25	1.19	1.15

출처: 통계총(2010), 인구동향조사 각면도,

10) 초 저출산국: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옥스퍼드 인구 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Korea Syndrome)’이라고 이름 짓고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또한 유엔미래포럼은 “출산율이 1.1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2009).

이와 같은 낮은 출산수준은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젊은 연령층과 노동력 인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고, 노령층의 비율은 크게 높아져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장영식 외, 2009).

이러한 경향으로 보면, 앞으로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잠재적 부양비(potential supportive ratio)는 계속 낮아질 것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장래의 사회보험료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지출은 사망률의 감소로 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합계출산율 1.19명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단기적자 발생 시기는 2033년이 될 것이며, 적립기금은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승권, 2006; 이삼식, 2006: 95-140).

2. 출산정책의 변천 과정

다음은 1960년대에 한국의 빈곤 악순환과 높은 출산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으로 정부의 인구조절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부터부터 현재까지의 정부의 출산정책 변화를 출산억제정책기, 과도기, 출산장려정책기로 구분하여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산억제 정책기(정부의 제→정책의 제→정부정책)

(1) 경제활동인구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복지부 주도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차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대체 인구 수준 2.1명 이하로 출산율을 저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처럼 정부주도로 선진국 수준인 6수준 → 1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김우수, 2008: 178-179).

한국의 출산 억제 정책기(1961~1995년)는 해방이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한국전쟁 중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전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1960년대 초 연평균 3%에 육박하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국토분단에 따른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전쟁으로 인한 생 산시설의 파괴로 빈곤이 극심하여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구성장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조절에 역점을 두어 연도별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정부 주관부서인 보건사회부의 보건조직망과 민간단체인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홍보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권태환·김두섭, 2008).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의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가족계획사업 연도별 주요내용(1960~1990)

구분	199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국가 정책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61) · 인구목표와 사업목표량 설정('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제정('73) ·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설치('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억제대책의 강화('81) · 모자보건법개정('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억제정책의 유명무실화('90) · 기존 인구성장억제 정책의 폐지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96)
사업 주관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	정부 각 부처 참여	보건사회부
주요 대상	· 농어촌지역주민에 치중 ('62)	· 도시영세민과 직장근로자에도 치중('74)	· 특정집단에 대한 선별접근(20~29세층)	
피임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궁 내 장치 등 일시 피임 보급에 치중 · 피임약제 수입 생산 금지 해체('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관수술의 도입('76) · 피임약제 국내생산의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수술의 보급에 치중 	
홍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녀 갖기 운동전개 · 요원증심의 대인접촉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녀 갖기운동 전개 · 인쇄매체의 활용 · 중고등학교에서 인구 교육('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녀 갖기 운동 전개 · TV등 전파매체의 활용 	
사회 지원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을 개정('76)하여 인적공제를 2차녀로 제한 · 2차녀 불임수용자에 대한 공공주택입주권 부여('78) · 가족법개정('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다원화 · 1차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도입(무료 분만 및 1차 진료) · 여성지위향상 및 남아 선호의 불식을 위한 제도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가 사장됨('94) · 소득세 인적 공제 범위에서 자녀제한제도 철폐('94)
민간 단체	대한가족계획협회('61) 가족계획어머니회('68)	새마을 부녀회 가족 계획부		

출처: 권태환·김두섭(2008), 인구의 이해 4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 인구구조 변화

1950년대 초까지는 전후 ‘베이비 블’의 여파로 가임연령층이 대폭 증가하여 기존의 출산억제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특정집단(20~29세)을 선별, 접근하여 불임수술을 보급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홍보도 인쇄 매체뿐 아니라 TV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1~2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분만비와 1차 진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시책을 새로이 도입하였고,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다원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지급을 2명의 자녀까지로 제한하였으며, 고등학교까지 2자녀에 대한 학비의 세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조병구 외, 2007).

1960년대에는 출산율 감소에 목표를 두어 피임기구의 수입과 생산금지법규를 폐지하고, 3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요원중심의 대인홍보에 비중을 두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74년부터 도시영세민과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계획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가족계획에 남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 예비군을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족계획사업은 시행 10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4.53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면서 1971년부터 2자녀 갖기 운동으로 더 강한 출산억제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억제정책은 가족계획사업의 확대와 함께 산아제한에 대한 법적·금전적 지원도 포함하였다.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우생학 및 유전학적 이유, 특수 전염성 질환, 강간 등에 한하여 필요불가결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였으며, 피임 실천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 및 보상제도를 포함한 사회지원시책을 도입하였다(김우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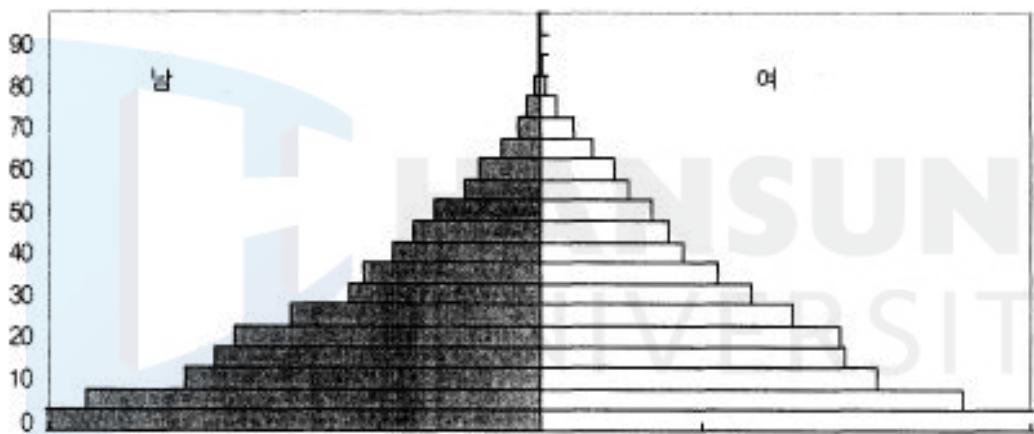
그 외에도 1980년 공공병원에서 2자녀 출산 후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출산비용 감면, 1982년 불임수술, 자궁 내 장치 시술 의료보험 적용, 2자녀 이하의 불임수술 수용자 주택자금·생업자금융자 우선지원, 저소득층 불임수술 수용자 생계비 지원, 2자녀 이하 불임수용자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1차 무료

진료 실시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녀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에 배우자의 친정부모를 포함시키는 등 여성지위향상과 남아선호의 불식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한 시기였다.

이러한 출산억제정책으로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198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인구의 대체수준이하로 떨어져 출산억제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으며, 가족계획사업 역시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부실화 되어 기존인구성장억제정책이 폐지되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조병구 외, 2007).

이 당시 인구구조는 아래 <그림 3-2>와 같이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도 60%이상을 차지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김우수, 2008: 184).

<그림 3-2> 1960년대 인구피라미드



출처: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이와 같은 구조는 경제발전의 요소로 작용하여 경제개발 5개년 7차 계획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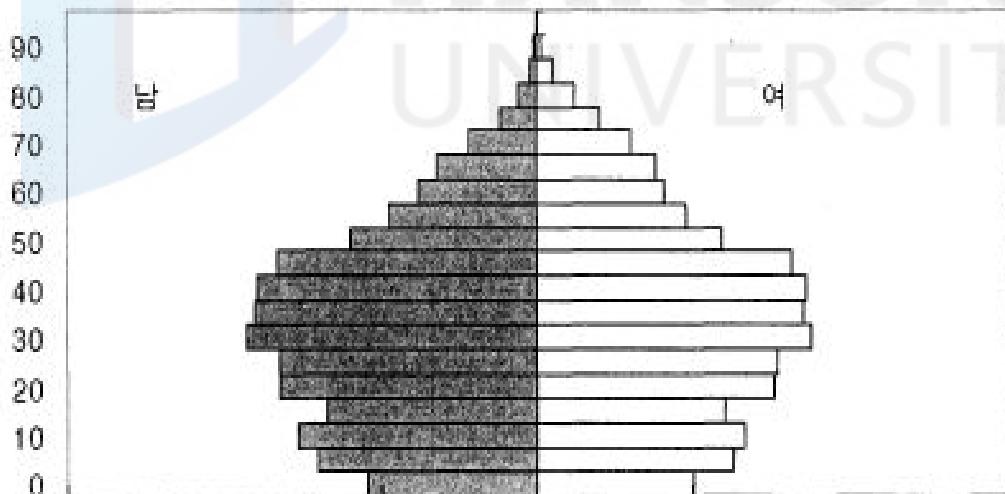
2) 과도기(정부의 제→정부정책)

(1) 경제활동인구

이 시기를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기(1996~2003)라고도 한 1990년대 초에 외부단체 등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깊어만 갔지만 정부는 여전히 출산억제정책을 진행하였다. 즉 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 인구 자질향상정책으로 전환한 시기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출산억제정책의 역효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의 결과로 나타난 ‘성비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래서 복지부의 표어도 바뀌게 되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라는 출산정책이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김우수, 2008).

이 당시 아래 <그림 3-3>과 같이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인구 감소하는 항아리 형 구조를 띠게 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도 2000년 15~24연령대가 22.8%였던 것이 2003년에는 21.2%로 감소하여 항아리 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는 형태를 보여 주었다.

<그림 3-3> 1990년대 인구피라미드



출처: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이 시기 인구정책과도기 기간 중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는 총인구 대비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구구조 변화

이 시기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및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예견되는 노동력의 감소,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의 가중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 뿐 아니라, 성비 불균형의 심화, 청소년 성문제 및 높은 인공임신 중절율 등의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즉시 폐지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1996년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삼식 외, 2005).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과 사망률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인구분포의 균형, 가족보건 및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등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의 새로운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의 방향이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전환된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3) 출산장려정책기(정부의 제→정부정책)

(1) 경제활동인구

이 시기는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로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장

려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김우수, 2008).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1996년 이후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였으나, 그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하에 형성되었던 소(小)자녀관은 여성의 권리 신장 및 사회 진출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고,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이 이르자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2004년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국가정책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인구구조변화

우선, 추진체로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2005년 9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¹¹⁾이 제정되었고, 이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실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2005년 초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2006년 8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제1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2006~2010)’을 발표하게 되었다(하연희·문맹재, 2007: 75~106). 또한 2008년 11월에는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로 도입된 정책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양육지원수당,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반영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효과의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의 규정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윤은숙, 2011: 1).

목표로 2006년 처음 발표당시 3대 분야 230개 과제 추진을 계획하였다가 200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4대 분야 237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4대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하연희·문맹재, 2007: 75).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한다.

둘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내실화,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 기반을 마련하며, 주거·교통·문화 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를 제고하며,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교육·홍보,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중앙·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하며, 정책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새로마지 플랜 2010’의 연차별 투자금액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새로마지12) 플랜(2006~2010)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06~'10							
			'06	'07	'08		'09		'10	
	기준	보완	기준	기준	기준	보완	기준	보완	기준	보완
계	32.0	40.3	3.7	5.7	7.1	8.4	7.3	10.8	8.2	11.7
저출산	18.8	19.1	2.1	3.2	4.0	3.8	4.6	4.7	4.9	5.3
고령화	7.2	15.0	0.8	1.3	1.8	3.2	1.4	4.7	1.9	50
성장동력	6.0	6.2	0.8	1.2	1.3	1.4	1.3	1.4	1.4	1.4
기타	0.034	0.016	0.001	0.007	0.008	0.003	0.009	0.002	0.009	0.003

출처 :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06년 3조 7천억 원, ‘07년 5조 7천억 원, ‘08년 8조 4천억 원, ‘09년 10조 8천억, ‘10년 11조 7천억 원으로, 총 투자규모는 약 40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분야에 19조 1천억 원(47.4%),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에 15조(37.2%), 성장동력 확보에 6조 2천억 원(15.4%)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저출산 분야에 대한 정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와 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래 [표 3-5]는 출산억제정책기부터 출산장려정책기까지 출산에 관련된 시대별 변화과정 표어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22만 9천명으로 1970년의 1/4.4배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종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변동을 모색하였다(윤은숙, 2007: 58).

[표 3-5] 출산관련 표어 변화과정

연도	표어내용
1961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1963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1966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1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2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1986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1990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2004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06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출처: 윤은숙(2007),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p.57.

12) 새로마지: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새로마지 플랜 2010’은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어 2005년에는 세계 최하위로 감소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위기극복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계획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상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출산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때, 당시의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출산억제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여성의 출산의지는 정부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존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2 절 주요국의 출산장려정책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선진국과 한국과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각국의 출산장려정책 비교

아래 [표 3-6]은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4년 1.15명에 이어 2005년 1.08명으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1.19명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2.00명, 독일의 1.38명, 일본의 1.37명보다 훨씬 못 미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한국은 현재 극 저출산(lowest-low fertility)국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선진국에 비해 더 급격히 감소했다는 의미이며 출산율 감소에 대응한 가족복지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3-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9	1.15	-	-	-	-	-	-
2008	1.19	1.37	2.09	1.96	2.00	1.41	1.38
2007	1.25	1.34	2.12	1.90	1.96	1.38	1.37
2006	1.12	1.32	2.10	1.84	1.98	1.35	1.33
2005	1.08	1.26	2.05	1.79	1.92	1.32	1.34
2004	1.15	1.29	2.05	1.77	1.90	1.33	1.36
2003	1.18	1.29	2.04	1.71	1.87	1.29	1.34
2002	1.17	1.32	2.01	1.64	1.86	1.27	1.34
2001	1.30	1.33	2.03	1.63	1.88	1.25	1.35
2000	1.47	1.36	2.06	1.64	1.87	1.26	1.38

출처 :통계청(2009).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선진주요국의 출산정책을 살펴 본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국민 소득, 산업화의 발달정도, 복지제도수준, 여성인권의 위치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들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다(윤은숙, 2011: 27).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여 출산력 증대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적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을 사회문화적·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 [표 3-7]과 같다.

[표 3-7] 각국의 출산율과 사회적·정책적 원인

국가	구분	출산율	사회문화적·정책적 원인
상대적 고출산 국가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6~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및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지원제도 정착(출산·육아휴가 등): 프랑스·스웨덴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탄력적 시간근무제, 구직 재취업용이 등): 미국 -공 보육 제 확립 : 프랑스, 스웨덴 -저가의 보육서비스 시장형성 : 미국 ○ 양육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제도 발달, 높은 소득 대체율 유지): 미국 제외 ○ 이민자 수용, 다양한 가족 수용(혼외출산 등) 증가
	불어권 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1.9명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 (탄력적 시간근무제, 구직 재취업용이 등): 미국 -공 보육 제 확립 : 프랑스, 스웨덴 -저가의 보육서비스 시장형성 : 미국
	영어권 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6~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제도 발달, 높은 소득 대체율 유지): 미국 제외 ○ 이민자 수용, 다양한 가족 수용(혼외출산 등) 증가
상대적 저출산 국가	남유럽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1.1~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부장적 사회 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카톨릭 문화, 유교주의 등)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고용 불안 등) -육아휴직 미활용 및 제도 미정착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독일어권 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3~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고용 불안 등) -육아휴직 미활용 및 제도 미정착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폴, 대만, 홍콩)	1.3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당지원 미흡, 출산~결혼 후 분가까지 부모책임)

출처: 보건복지부(2007). 각국의 출산율과 사회적·정책적 원인.

위 [표 2-7]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국가들은 양성평등 문화육아를 위한 사회적 기반 출산·육아휴가 등이 정착되어 있어서 일·가정의 양립이 용이한 사회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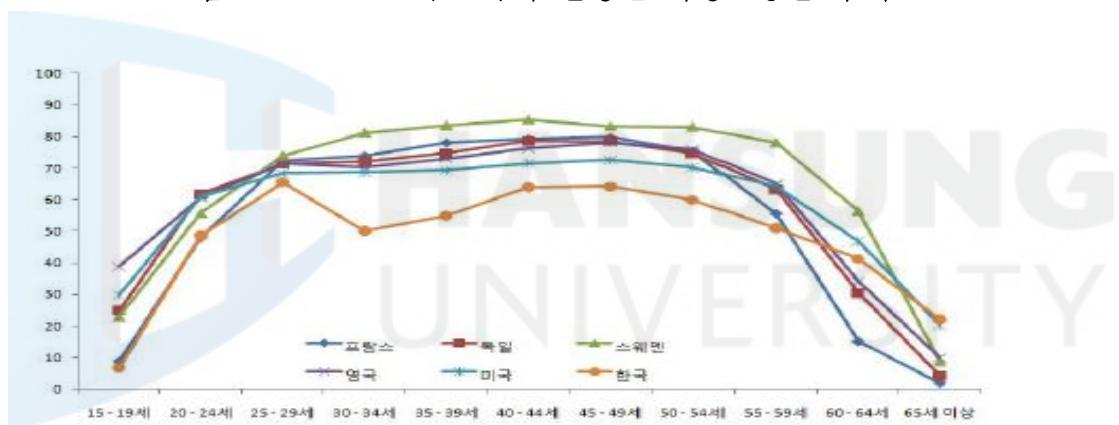
특히 유연한 노동시장구조, 공보육 확립, 저가의 보육서비스는 주목할

만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국가들은 가부장적 사회문화, 경직된 노동시장구조 등이 정착되어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게 마련되어 있었다(신효영, 2009: 43).

자녀의 출산부터 결혼 후 분가까지 부모책임이기 때문에 자녀양육부담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아래 <그림 3-4>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율이 높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고용율이 유지되며 역U자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M자 형태인 한국과의 차이를 보여준 현상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3-4> OECD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고용율 추이



출처: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OECD(2009), Labor Force Survey.

결혼 적령기인 29세 이전까지 고용추이는 30-40대를 최저점으로 M자 커브 형태를 보이고 있어 출산육아기인 30-34세에 최저점으로 하락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남을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조사된 국가들 중에 최근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대적 고출산국인 프랑스, 북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

이고 있는 스웨덴, 영어권 국가인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출산율 현황과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판단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선진주요국을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율 현황

1900년대 미국 여성들은 평균 네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195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만 해도 3.7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경제 대 공항을 겪으면서 1.8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후 미국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인구복지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인구 대체율인 2.1명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가족정책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중심의 복지정책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다(방영이, 2010: 40).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가족, 특히 저소득층의 편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2)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1962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수당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프로그램의 실시로 한시적 부족만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동 수당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

하고 있다(방영이, 2010: 40). 2010년 자녀 1인당 1,000달러로 소득 공제액을 높였다.

미국에도, 무급휴가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FMLA 시행 이후 여성들의 출산 후 복직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복직율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Waldfogel, 1999 & 2001).

반면, 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복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홍승아·장혜경, 2006).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급 양육휴가가 취업률을 높였으나 휴가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성의 노동숙련도를 낮추어 노동시장으로 복귀 시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OECD, 2002: 홍승아·장혜경, 2006).

미국의 편모가정에 대해 무료로 공립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성노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Chevalier와 Viitanen(2002)은 미국에서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육지원 효과의 크기, 즉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여 Blau(2000: 287-299), Anderson(2000: 119-135) 등은 최대 0.4를 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탄력성을 갖는다고 추정하였다.

부모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들은 휴가가 끝난 뒤에도 아이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한 반면 어머니들은 노동시장 참여도 덜하고, 노동시장 내 만족도도 덜하게 나타났다. 특히 휴가 기간이 연장되고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집에 남아서 양육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의 육아휴직 관계법은 1983년에 제정된 '가정 및 의료휴직법'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였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이 중병일 때 연간 최고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하고, 휴가 기간 중 건강보험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후 직장복귀 및 그 직장과 동등한 근무조건 회복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법이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제도는 없으나 연방정부는 주 정부를 통해서 저 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 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보육시설로는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보육원이 있으며,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간 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모두 공립이며 학교 부설로 되어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지 않아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방영이, 2010).

미국도 FMLA(Family Leave and Medical Leave)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Averett & Whittington, 2001: 403-417). 미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원주민, 흑인, 히스피닉 그리고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유연한 노동시장구조로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율 현황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이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197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발생하자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기본 철학 하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문제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1.8~1.9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프랑스의 출산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김형준, 2008: 111-134).

이처럼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저출산을 경험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60년대 2.8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19세기 프랑스의 인구는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그쳐 1.78까지 낮아졌다. 이렇듯 유럽 전체 인구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인구감소공포(fear of population decline)라는 사회적 문제로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점차 높아져 2008년엔 2.0까지 올라가 지금은 다른 유럽국가 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을 안정 수치까지 올린 배경은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출산 증가를 위해 우선 가족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두 자녀 사회규범이 사라지고 세 자녀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었다. 이렇듯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한 결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이후 가족구성 및 출산장려를 보다 효율성 높게 직접적으로 통일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장려지원체계를 유아환경정책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2005)

그 후 수십 년 동안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가족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데 힘입은 것이다(방영이, 2010: 30).

(2)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중 가족수당제도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각종 가족관련 수당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족 상황과 수입액에 의해 제한 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특이한 점은 가족정책 중에서 찾을 수 있는데 1920년 프랑스에선 ‘어머니날’을 제정하여 대가족을 이룬 어머니를 포상하는 행사를 통하여 출산율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출산 장려가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었던 점이다(홍승아, 2005). 프랑스는 일찍부터 인구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함에 따라 출산장려가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출산정책은 어머니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출산정책의 근본 목적은 개별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을 국가가 함께 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가 가장 관대한 특성을 가지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인구 재생산의 책임을 여

성에게 지워 양육모를 대상으로 ‘전업주부수당(Unwaged Mother’s Allowance)’을 지급하자는 캠페인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즉 여성들의 역할을 노동시장의 참여보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장려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저소득부모의 보육비를 절감해주는 듯하지만, 근로 유인을 고취하는 측면에서는 높은 유효세율로 인하여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희철 외, 2007: 347).

프랑스의 경우 자녀출생순위나 아동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장려와 연계되어 있다. 최근의 추세로 프랑스와 같이 수당 지급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동수당이 불충분 할 경우에 출산율에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장혜경·송치선, 2005).

Laroque Salanie(2005)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가족수당 2.5% 증가는 출산율을 0.07명(4%)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랑스가 1994년 아동 양육수당(APE,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을 2번째 자녀까지 확대한 정책변화는 두 번째 자녀의 출생율 약 10.9% 가량 증가 시키고, 세번째 자녀의 출생은 약 2.4% 감소시켜 전체 출생아수를 약 3.7% 증가시켰으며, 2004년 출산관련 제 수당을 하나의 수당으로 통폐합한 PAJE(Prestarion d’Accueil du jeune 뚫못)의 도입은 출산율을 약 4.7% 증가 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민희철 외, 2007: 265).

1940~1950년대의 프랑스 가족수당이 프랑스의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였다(Chenais, 1989). 반면 Dumont(1990)는 가족정책의 출생촉진 효과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며, 그것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프랑스의 가족 관련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전의 절대액으로 보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4년 양육수당(APE) 개혁이 후 노동참가율은 크게 떨어진 반면 출산율은 아주 조금 증가하였다(Lalive & Zweimuller, 2005).

결과적으로 가족수당은 아동빈곤 해결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3)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율 현황

스웨덴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저하되어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증가세로 반전되었는데, 이러한 출산율의 반등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 요인은 출산, 육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립을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은기수 외, 2005).

2000년에 1.56까지 낮아지다가 2000년 이후 약간 상승하여 2007년 현재 1.75명이다. 스웨덴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가족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는 적어도 출산 예정일 이전 6주간, 출산이후 6주간은 전일 휴직이 가능하고 아버지의 경우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또는 휴직기간중의 고용보장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데, 육아 휴직을 청구하거나 휴직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사회 보험에서 피 보험자 자격도 지속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이전과 동일한 지위로 복귀가 가능하여 기혼여성이 자녀양육 후에도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신효영, 2009: 49).

스웨덴의 출산율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 남성들의 부모휴가 참여가 늘어날수록 이후의 출산에 (특히 둘째아, 셋째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장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Duvander & Andersson, 2005: 13; 홍승아·장혜경, 2006). 또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특히 부모휴가 정책의 유연성이 여성경제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홍승아·장혜경, 2006).

스웨덴의 출산터율이 빨라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스웨덴 부모휴가 제도의 “speed premium” 영향으로 설명된다(Andeerson, 2003: 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¹³⁾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과 공식적인 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

13) “speed premium”이란 부모들이 (주로 여성들) 급여 만료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아이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의 보상을 종전 소득수준으로 소득 보전을 하는 것이다(Anderson, 2003).

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유지하는 두 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스피드 프리미엄은 자녀간의 터울을 줄여주어 결혼과 첫째아 출산연령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민희철 외, 2007 :289). 휴가 금여를 종전 수당과 연계시킨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이전에 취업에 대한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ndstrom, 1991).

이런 스웨덴의 출산율의 변화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 및 육아 관련 가족 휴가 정책 및 수당제도, 아동보육서비스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 보육비용 지원, 부모보험제도, 가족 및 아동수단제도, 현금급여제도 등이 있다(Andersson, 2002: 119-135).

실제적으로 스웨덴과 가족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 투자에 비하여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스웨덴의 가족수당제도

스웨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1931년 먼저 출산휴직제도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75년 부모휴가법이 제정되었고, 1978년 『육아 등 휴직 권리에 관한 법』이 형체를 갖추면서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부모로 확대되었다. 이제도의 대상은 친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 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다. 특히 양쪽 부모가 모두 편리하게 권리행사 가능하게 되어 있고 법률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동등한 이용이 가능하다(안현미, 2010: 68).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일, 자녀양육 양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비과세 현금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950SEK을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셋째아의 경우 254SEK다, 넷째아의 경우 760SEK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의 경우에는 950SEK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특별아동수당은 부모의 이혼, 별거

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된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지만,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hler et al., 2002: 641-680).

보육비용 지원은 출산 후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모가 분담하고 있으나 부모 부담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월수입, 전체 자녀 수, 보육시설 유형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기관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의 약 10% 지불하게 되고,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용의 약 15% 지불하게 되어 있어 비교적 부모 부담금이 적은 편이다.

특히 가족이 보육료를 지불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는 보육료를 일정기간 대출 받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방영이, 2010: 35). 부모 보험제도와 부모현금 급여(Parents' Vash Benefit due to child-birth)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서 첫 번째 자녀 출산 후 30 개월 이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와 동일한 조건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어 장려의 효과가 크다(홍승아, 2005: 111).

현금급여제도는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으로 1974년 실시한 부모 보험 제도에 근거한다. 일시적 부모현금 급여는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 볼 경우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면 지급된다.(신효영, 2009: 45).

또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를 제공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며, 이런 관대한 휴가제도는 스웨덴의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웨덴 남성들의 부모휴가 참여가 늘어날수록 이후의 출산에, 특히 둘째, 셋째 아이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Duvander & Andersson, 2005: 홍승아, 장혜경, 2006). 스웨덴의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웨덴 부모휴가제도의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의 영향으로 스웨덴의 출산터율이 빨라지는 경향이 발

견된다고 한다.”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이란 부모, 주로 여성들이 급여 만료 기간이 끝나기 전 다음 아이를 임신한 경우, 휴가기간의 보상을 종전 소득수준으로 소득보전을 하는 것으로, 이는 피급여자에게 유리한 급여제도가 된다. 적용기간도 1980년에는 적용되는 만료기간이 24개월이었지만, 1986년에는 30개월로 확대되었다(Andersson, 2003: 장혜경 외, 2005).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력한 수준이며, 육아 휴직과 공식적인 보육인프라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유지하는 두 축으로 활용되어 왔고, 스피드 프리미엄은 자녀 간의 터울을 줄여주어 결혼과 첫째아 출산연령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민희철 외, 2007: 289).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프랑스, 북유럽국가 중 상대적으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 등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캐나다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율 현황

Brouillette 외(1993: 260-278)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현금혜택은 작지만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외(1994: 181-201)와 Milligan(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당 1,000 CAD 증가는 자녀출산을 17퍼센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igan, 2005: 593-555).

(2) 캐나다의 가족수당제도

캐나다의 가족정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수준 및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는 세계 지원으로 CCTB가 있다. 이는 해당 가정의 자녀 양육비용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행정적으로 같이 처리되는 국가아동수단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아동장애수단(Child Disability Benefit)을 포함한다. 자격요건은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주 부양자로서 지원금의 수준은 자녀수와 자녀의 연령, 지역, 가구소득,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본 지원금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월 106.91 캐나다 달러를 제공하며, 3번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 당 월 7.50 캐나다 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Baker & Cameron(2000: 1-27) 그리고 Milligan(2005: 593-555)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이후 퀘백주의 보육시설 이용은 다른 주에 비하여 14.7% 정도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올릴 경우 보육시설 비용은 약 4.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0~4세의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공급은 퀘백주에서 다른 지역 주에 비하여 7.7% 증가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율을 10% 증가 할 경우 여성노동공급은 2.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민희철 외, 2007: 365).

앨버타 주 정부는 연령별로 달리한 기본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 소득 3만 7.178 캐나다 달러를 추가하는 부분의 2%만큼을 차감하여 제공하고 2자녀 가정의 경우 추가하는 부분의 4%를 차감하여 제공한다. 퀘백주의 가족정책 중 보육지원으로는 1997년 이전 퀘백주에서는 관허 보육시설 및 규제 대상 보육시설의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일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1997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4세 아동에 대해서 매일 5 캐나다 달러만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다(Andersson, G., 2002).

아래 [표 3-8]은 이 외 각국의 수당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사례이다.

McDonald(2002)는 주 양육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버지를 통한 세금 인하보다 효율적으로 자녀 양육에 활용될 수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Barmby와 Cigno(1988: 31-51)는 영국에서 아동수당이 자녀출산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Ermisch(1988: 563-576)는 아동수당이 가구원 수가 아닌 출산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Gauthier와 Hatzius(1997: 295-306)는 OECD 22개국 자료(1970~1996년)를 사용하여 횡단시계열분석을 실시하여 가족수당이 합계출산율에 작으나마 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Brouillette 외(1993: 467)의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현금혜택은 작지만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외(1994: 181-201)와 Milligan(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당 1,000 CAD 증가는 자녀출산을 17페센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igan, 2005).

Kalwij(2010: 503-519)는 16개 국가의 가족정책에의 지출액의 변화가 출산시기와 완결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수당은 출산 시기나 완결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줄여주는 정책(육아 휴직 연장,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더 갖고 일찍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Duclos 외(2001: 136)는 퀘백주의 현금지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현금지원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출산율의 시기(tempo) 효과인지 아니면 가족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Romanov(2007)의 연구는 이스라엘에서 아동수당의 급격한 감소가 저소득가구와 이민가구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하였다. 수당제도의 효과는 혼준자녀수나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Laroque와 Salnié(2008)는 1997~1999년간 프랑스 노동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이산선택모델을 적용하였다.

Neyer(2003: 21)는 가족정책을 노동시장정책, 돌봄정책, 젠더 정책과 연결시키는 국가에서 출산율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 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성 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가정과 사회의 성 평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 평등과 양립지원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Sleebos, 2003).

[표 3-8] 외국의 수당 관련 정책의 효과성 분석사례

연구자(연도)	대상 국가	분석자료	분석방법	종속변수	정책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Gauthier&Hatzlus (1997)	OECD 22개국	1970~1996	시계열 회귀분석	합계출산율	가족수당	작지만 긍정적 효과
Broulette et al.(1993)	캐나다	1985~1988 소비자조사	최대 우도법	조건부 출산률	직·간접 현금지원	작지만 긍정적 효과
Zhang et al.(1994)	캐나다	1971~1983	GLS	기간출산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족수당, 모성휴가	유의한 긍정적 효과
Erimisch(1988)	영국	1971~1986	시계열 회귀분석	출산순위, 연령별 출산율	아동수당	셋째, 넷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시기를 촉진
Milligan(2005)	캐나다	1991, 1996	프로빗 회귀분석	6세 이하 자녀유무	퀘백주의 아동수당	지원액의 증가는 둘째자녀 출산율 20.5%p 증가
Dudos et al(2001)	캐나다	1981~1997	OLS	첫째, 둘째, 셋째자녀 출산율	퀘백주의 현금지원	출산율 변화에 영 향을 미치나, 시기효과인지 가구규모 변화인지 불분명
Kalwj(2010)	서유럽 16개국	1980~2003	시계열 분석	완결출산, 출산시기	가족수당, 자녀양육비	효과 없음

Laroque & Salrie(2008)	프랑스	1997~1999	이산선택 모델	첫째, 둘째, 셋째자녀 출산	아동수당	셋째자녀 출산에 효과(보편적 수당 은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에 효과)
---------------------------	-----	-----------	------------	--------------------------	------	---

출처: 이삼식 외(2010),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실제 많은 선진국의 연구에서 수당은 출산시기 및 가족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빈곤 아동 예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2차 세계대전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1950년대 서구복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하 임금상승 억제, 출산장려 차원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아동수당은 대다수 OECD 국가(OECD 국가 중 미실시 국가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등 88개국에서 가족과 아동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 지급). 아동수당 지급 형태는 초기에 근로자, 가족규모, 아동출생순위, 자산조사 등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으로 적용하였다. 예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표 3-9]는 외국의 아동수단 관련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9] 외국의 아동수당 관련 정책효과 분석결과

대상 국가	연구자(년도)	기간	종속변수	분석방법	아동수당 관련정책	출산력에 주는 영향력
OECD	Gauthier & Hatzius, 1997	1970-90	합계출산율	시계열 회기분석	가족 현금 급여	약하나 긍정적 효과
캐나다	Zhang, Quan & Meerbergen (1994)	1971-83	합계출산율	일반회귀모형	가족수당	강한 긍정적 효과
스웨덴	Walker(1995)	1955-90	합계출산율	시계열 분석	아동수단	약하나 긍정적 효과
	Kohler 등(2005)				아동수단	효과는 적지만 출산율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영국	Emisch(1988)	1971-86	출산순위·연령별 출산율	시계열 회귀분석	아동수당	급여수준의 상승으로 세째아, 넷째아 출산수준 및 첫출산 시기에 변화효과

출처: Gauthier A.H.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Families and Demographic Behavior."

Sleebos, Joelle E(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조세감면 등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조세제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여성노동 공급에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 되었다(민희철 외, 2007: 310). 이를 다양한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근로가족세액 공제가 부양자녀가 있는 무배우자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1999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 까지 약 5% 포인트 증가시켰으며, 이중 상당 비중은 풀타임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파트타임직업으로의 전환도 상당수 나타났다. 한편부양자녀가 있는 커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도 일부 나타났는데, 이때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남성의 경우 증가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5) 한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한국 정부는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으로 약 50여 년간 역대 여성들의 출산유형을 변화시키려는 가장 강력하게 출산력 통제를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써의 중요한 틀로 목표를 국가적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현상의 변화에 의해 구조적인 문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입법정책 연구회(2006)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구체적이고 질·양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적정인구 및 합계 출산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 목표가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역대정권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분산투자를 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위기가 상존하고, 재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는 나라는 일반적인 전략보다 집중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분산 투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역시 각 부처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예산과 조직 인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긴급도, 국민의 수요정도, 효과성과 능률서의 예상 등을 미리 분석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것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방지제도 도입이라고 본다. 일 년 출산아 2배가 넘는 약 100만 명의 태아가 매년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죽어가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공임신 중절의 허용조건을 임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자에게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회예산정책처(2007)는 설문조사와 프로그램 논리 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래 <그림 3-5>의 프로그램 논리 모형은 저출산 정책 수행의 논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자원(inputs), 활동(activity), 산출물(output), 도달된(reached) 고객, 최초 산출결과(initial outcome), 중간 산출결과(intermediate outcome) 및 장기적인 산출결과(long-time outcome) 등이다.

프로그램논리 모형의 단계는 크게 프로그램 전달(집행)과 프로그램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전달단계는 정부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인 투입((inputs), 각종서비스의 제공, 법률이나 규제의 집행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활동(activity) 그리고 자원과 활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물(outputs)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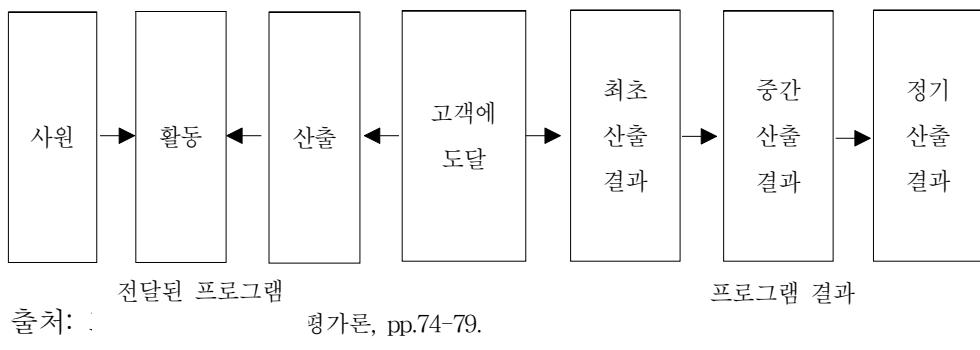
프로그램 결과 단계는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구조(outcome structure)로서 정부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이다.

한국에서 주거문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삼식 외(2005)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있다. 그들에 따르면, 주거 특성들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농촌에서 주택소유 여부, 주거비 부담 및 주거밀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유의도 0.05 수준)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주거 밀도, 주택소유 여부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주거 문제는 도시에 한정하여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래 <그림 3-5>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3-5>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저출산 문화가 한 번 형성되어 버리면 변혁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본다.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개인에게는 고용 연장으로, 국가는 보험체정 원활을 기업에는 값싼 인력을 공급해주는 효과를 올려 활성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과 추진 체계간의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살려야 한다. 저출산 정책 추진 체계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모호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현재는 너무 낮아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로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여성들의 평균초혼연령은 점점 높이지고 있는 통계청(2009)의 아래 <그림 3-6>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3-6> 서울 평균 초혼연령



출처: 통계청(2009), 인구동향조사.

위 도표에서와 같이 결혼의 만혼화 및 독신 선호 증가는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국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등 임산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으며 보육료지원정책엔 신생아로부터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수혜자들이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는 아래 [표 3-10]과 같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3-10] 중앙정부의 출산정책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자녀성장에 따른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 맞벌이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다문화가정 및 난민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임산부를 위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철분제 지원 의료기관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출산·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모유수유 지원.
일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우대카드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신혼부부 가정 입양아 가정 장애인 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10) 임신·출산·육아 포털(www.agalove.org)의 출산지원시책.

해당부분 추출하여 연구자 재구성.

한국의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4)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

책을 평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2009).

첫째, 기존 저출산 정책은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성장 동력 기반 붕괴와 국가경쟁력 약화라고 하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저출산 문제와 과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즉, 부모들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추가적인 아이 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양육비 경감대책은 개인적인 체감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저소득층 위주의 비용지원 정책으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기준으로 비용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자녀양육가정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맞벌이 가구, 베이비 블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저조하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되어 있어서 교육·주택 등 각 부문의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¹⁵⁾는 온라인 일반국민 패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저출산 정책 사업들이 국민의 출산계획에 미친 영향이 그리

1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0), 2011-2015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 2010-정책개발 -013.

15) 국회예산정책처. (2010).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사업평가07-15, 서울: 대한민국 국회.

높지 않으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며 정책 추진체계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사업내용 및 출산율 증가와의 논리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진행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에 있어서 영유아양육비 지원정책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고, 학교교육 및 빈곤아동 지원정책, 국내입양 지원정책,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지원정책, 가족생활 및 가족 친화적 기업 지원정책은 인지도 평가결과가 낮았으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국내입양지원정책으로 지적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이 드러났다.

(2) 자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정책

2011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총 2,682건으로 국고를 제외하게도 시도 그리고 시군구비 1조 6,12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양육지원에 1조 59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a).

한국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5년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며, 2011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진행 중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기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 1차 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 등 4개 분야에서 237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중 저출산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자녀양육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정

책, 육아 인프라 확충 정책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과 학교·사회교육 강화, 그리고 가족문화 조성 정책 등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그리고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조성정책 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이명석 외 2012: 159).

이러한 제 1차 계획은 2008년 부분적이나 보완을 거쳐 2010년 마무리되었다. 또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 1차 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 22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 1차 계획과 달리 제 2차 계획은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명석 외, 2012 : 160).

아래 [표 3-11]는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출산장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5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의 경우 42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정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회성의 출산양육지원금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성격은 양육수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허만형·이정철, 2011: 387-409).

[표 3-11]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통계(2010) (단위: 개, 만원)

출생순위	기초자치단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금액	최대금액
1	74	60	66.46	5	420
2	138	87	106.70	5	600
3	174	177	206.25	5	1,200
4	175	231	279.77	5	1,200
5	175	263	255.35	5	2,400

출처: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재구성,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p.162.

지방의 경우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처음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로, 2001년 1월 1일부터 예산 15억원을 편성하고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1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기초 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 (단위: 수)

	2005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서울	2	2	11	20	24	25
부산	-	-	1	5	7	10
대구	-	-	1	1	1	2
인천	2	3	4	10	9	3
대전	-	-	-	-	-	1
울산	-	1	3	3	3	4
경기도	13	18	24	25	26	30
강원도	3	11	9	13	13	14
충청남도	5	8	9	13	13	14
전라북도	8	8	8	12	11	11
전라남도	9	15	12	13	19	19
경상북도	12	14	13	17	20	19
경상남도	11	16	14	18	18	14
제주도	3	-	-	-	-	-
계	82	109	123	162	176	176

출처: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재구성, 이명석 외(2012), pp.160-161.

위의 표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방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10년에는 17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새로 도입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자체 인구정책사례집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이 있다.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은 특히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었다.

또한 지방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다.

지방의 경우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경상남도는 5개 군(의령, 남해, 합천, 함양, 산청 등) 지역의 2003년 월 기준 출생율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의령군 대의면을 비롯한 54개 읍·면에서는 1개월간 출생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는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에 못 미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출산 축하금 지급, 보육료 지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시책 등이 있다.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은 특히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여 현재 전라남도와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경남 합천군 등 2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2001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청북도 청원군에서는 2003년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전수관리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10개 시·군·구에서 신생아 출산 시 보건소에서 축전과 함께 예방접종 안내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다복왕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04년도 3월부터 셋째이후 자녀로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경우에 아동 1인당 월평균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2004년 1월부터 둘째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액인 월 12~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각국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국민소득, 복지제도 수준, 여성의 일·가정양립 용이, 여성인권 수준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별로 각기 달랐지만 선진주요국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꾸준히 시행해 왔다. 이러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선진국이 주는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출산장려정책이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 중 미국,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해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장려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성공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 수당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바로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의 지급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성공한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에서 특히 아동빈곤의 완화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보육서비스 지원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은 저출산 극복을 한 나라에 비해 많은 부분 미흡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양육수단의 경우에도 소득 기준과 연령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장애 아동수당, 한 부모 자녀양육 수당의 지급과 같이 취약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수당 제도를 통한 출산장려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한국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계점이 많은 양육수당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같이 한국 현실에 맞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하길 요구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스웨덴의 경우처럼 육아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여성의 경제참가를 단절시키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가장 큰 출산장려정책의 모델을 본보기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금 지원은 주로 취약 계층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들의 양육비 부담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 및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도 스웨덴의 경우처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가족정책을 시행한 후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도록 정착화 시켜야 한다.

특히 스웨덴은 유아휴직 기간이나 유아휴직 중 제공하는 급여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관대해 육아휴직 기간은 총 480일로 자녀 연령 8세까지 시기를 조정하여 시간단위로 나누어서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출산율의 변화는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서도 출산 및 육아 관련 가

족 휴가정책 및 수당제도, 아동보육서비스 등에 주요하게 작용시켜야 할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각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국민소득, 복지제도 수준, 여성의 일·가정양립 용이, 산업화의 발달, 여성의 인권 수준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낮아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꾸준히 시행되어 왔기에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진국과 비교해 살펴볼 때, 정부는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조성,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직장 안정화, 성차별적 사회 환경개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출산장려정책의 보완 및 활성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 4 장 연구설계

제 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아래 기준의 선행연구에서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기초자료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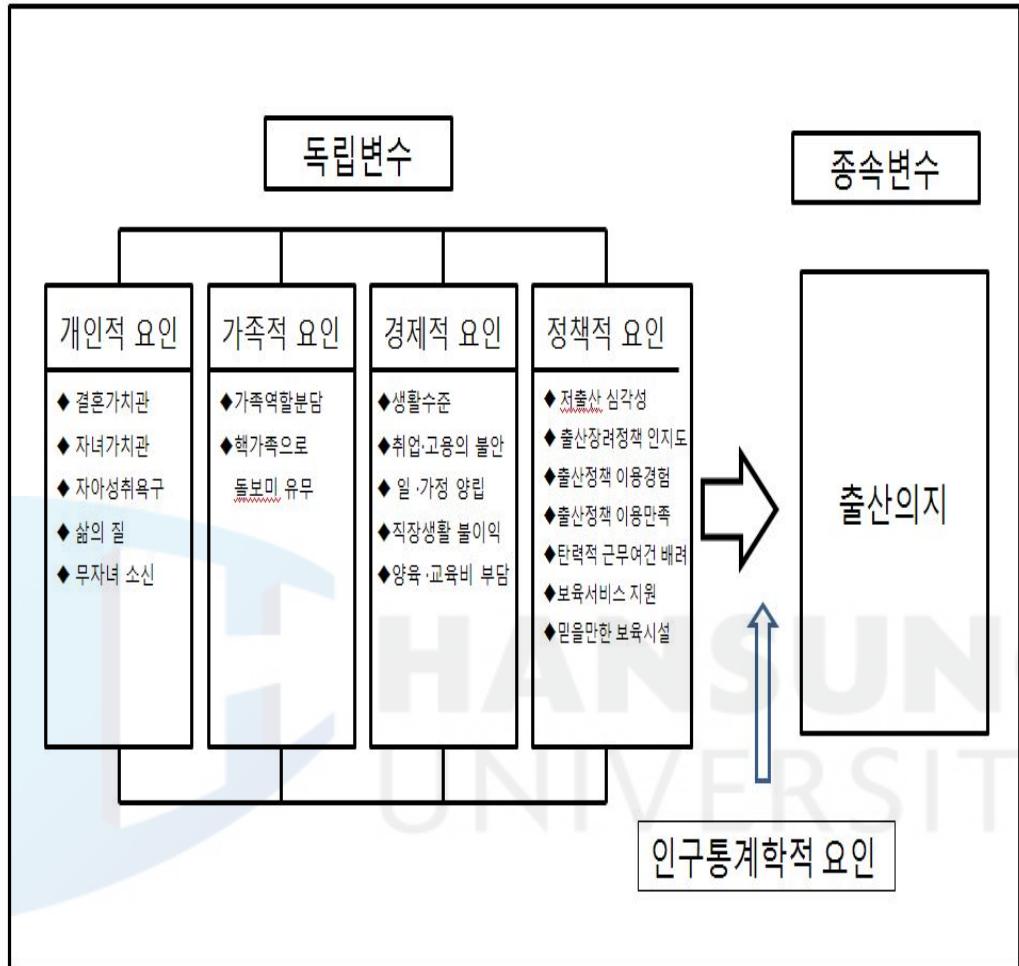
방영이(2010)의 개인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 윤은숙(2011)의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인식, 박길진(2009)의 일·가정 양립 연구,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의 사회적, 정책적 요인 연구 등을 근거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를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그리고 무자녀 소신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적 요인은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로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에는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 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을,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는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포함시켰다. 제시된 4개의 요인과 20개의 매개변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 4개를 중심으로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정부정책 요인(4가지 제시된 요인)의 방향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다음 연구모형은 <그림 4-1>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4-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작성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결혼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자녀가치관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자아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4. 삶의 질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5. 무자녀 소신은 생각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자녀 양육 과정에서 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출산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취업·고용의 불안이 인지될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3-3. 일·가정 양립이 해결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3-4. 직장생활 불이익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3-5. 양육·교육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4.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저출산 현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4-2.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4-3.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이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4.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5.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6. 보육서비스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7.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5.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출산의지 굳히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출산의지 굳히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2. 출산의지 굳히기는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3. 출산의지 굳히기는 희망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4. 출산의지 굳히기는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1.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2.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3.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4.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연령이 어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7-2.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7-3. 희망자녀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7-3.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8.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방향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1.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개인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2.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4.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이 되는 출산의지를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정부정책의 방향을 위한 출산의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기 위해 네 가지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대해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으로 설정했다.

둘째, 가족적 요인은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인한 돌보미 유무를 변수로 설정했다.

셋째, 경제적 요인에는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양립, 주택 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을 변수로 설정했다.

넷째, 정책적 요인은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을 변수로 설정했다.

1) 개인적 요인에 관련된 가설설정

현대 정보화 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결혼관뿐 아니라 자녀관에 대한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최문숙, 2007: 34). 탈 물질주의로 전환되어 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유로 결혼기피현상과 출산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자아실현의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두드러지면서 결혼에 이은 출산은 의지에 따라 출산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추론한다.

(1) 결혼가치관의 가설설정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선택이 된 요즘, 가치관에 따른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동안 만혼의 현상이 증가하여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인지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자녀가치관의 가설설정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점점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 자연히 다자녀를 거부하는 경향의 사회구조가 바뀌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의 척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긍정적인 자녀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자아성취욕구의 가설설정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여성도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아성취를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동등한 교육과 사회참여를 부여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여성들은 가정을 형성하여 가족에 대한 중요성 보다 또한 자녀를 낳는 일보다 자신의 삶의 질에 욕구를 갖는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중요도를 두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삶의 질의 가설설정

여성들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생산수단의 도구로써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러다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서양의 여성들도 학문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사회진출도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자신만의 생활에 만족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점점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투자하기에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5) 무자녀 소신의 가설설정

부모에 있어 자식은 농경 사회부터 노후 생활을 책임져 줄 든든한 기반이었지만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발달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은 점점 문화지체현상으로 인해 황폐해져가고 있는 현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자녀양육과 교육은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갈수록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 자녀효용이 낮다고 인식되어지고 있어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가족적 요인에 관련된 가설설정

오래 전부터 가족은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 강하여 이어 받았다.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삶의 과정이며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지내 왔다. 근래에 와서는 결혼적령기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란, 2007: 28).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다.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욕구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의 역할부담으로 돌리는 현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1) 배우자 및 가족역할 분담의 가설설정

배우자는 자녀양육에 공동분담하지 않아 가족역할분담으로 인하여 여성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출산을 꺼려하는 원인이다. 가족들이 역할분담을 하지 않고 여성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인지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2)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의 가설설정

최근에 이르러 맞벌이 가족, 단독 가족, 기러기 가족, 무자녀 가족, 주말부부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편부모 가족, 노인부부 가족, 동거 가족, 실험 또는 계약 결혼, 동성애 가족, 공동체 가족, 국제결혼 이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혈연이나 동거를 중시하는 전통사회 구성원에서 핵가족화로 이어 점점 탈가족화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돌보미가 낮아져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는지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3)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가설설정

한국은 지나치게 여성에게만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화가 강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배우자와 동등하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홍보가 효과적인 동시에 직장, 사회교육기관, 등 교육 장소에서 양성평등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양성, 불평등적 법·제도의 개선 없이는 여성의 출산의지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나 가족은 여성의 변화된 태도나 가치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취업의 필요와 욕구를 지닌 여성의 자녀를 출산할 때 취업을 포기하고 이로 인한 자신의 임금, 승진, 앞으로의 경력 단절과 같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돌린다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한다.

(1) 생활수준의 가설설정

경제수준에 따른 소득향상이 출산력을 높인다는 멜더스(Malthus)의 이론에 의해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사람은 금욕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자녀출산과 양육은 가정소득의 생활수준으로 인하여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취업·고용불안의 가설설정

직장여성의 출산법정휴가가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취업 여성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함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감에 출산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충분하게 보장 받는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일·가정양립의 가설설정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기혼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과 양육문제를 거의 여성의 책임으로 부담을 갖게 된다. 양성평등 의식은 아직도 가부장적 의식의 잔존에서 오는 괴리의 폭이 높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일·가정양립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지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주택 소유 현황의 가설설정

가족의 안식처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할 주택은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런 연유로 안식처인 주택마련이 되지 않은 경우 결혼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특히 대도시의 주택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결혼과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5)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불이익의 가설설정

취업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산 및 육아 관련된 가족 및 휴가정책, 아동수당제도, 아동보육서비스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의 우려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지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6) 양육비·교육비부담의 가설설정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양육비·교육비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에 높은 비중을 지출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출산의지에 양육비·교육비부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정책적 요인과 관련된 가설설정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청년실업 증가와 중장년층의 명예퇴직 증가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정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수록 출산장려정책이 가임가능여성의 만족도에 가까울수록 출산의 의지가 높을 것으로 유추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여 자녀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1) 저출산 심각성의 가설설정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현재의 고령화 문제를 훨씬 능가하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고령화의 근본원인은 크게 보면 평균 수명연장과 출산율을 저하시키는지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의 가설설정

출산장려정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수혜자들이 특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따라 출산의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3)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의 가설설정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출산여성들이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한 정부지원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관할하는지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얼마나 인지하는지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의 가설설정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바로 자녀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 아동수당의 지급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대책으로 보아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5) 탄력적 여건 근무 배려의 가설설정

자녀를 출산한 후에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이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열악한 현실이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무에 대해 탄력적인 배려가 주어지면 출산에 대한 의지도 높아질 것인지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6) 보육서비스지원의 가설설정

현재 보육서비스지원은 상당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규모도 실질적인 도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력을 다해야 자녀를 소중히 여길 때 출산의지가 높아질 것인지 이에 가설을 설정하였다.

(7)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가설설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양육을 위한 보육지원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믿고 맡길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질 높고 비용이 저렴한 공보육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때문이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보육시설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기는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출산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조작화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에 포함한 독립변수는 4개의 변인, 즉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이 있고, 이에 따른 20개의 하위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4개의 변인이 있으며, 종속변수로는 출산의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인 방영이(2010)의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윤은숙(2011)의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박길진

(2009)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의 ‘사회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기존의 설문지 들을 현행에 맞춰 수정·보완하고 연구자의 설문 제작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설문 도구를 재구성하여 30문항의 설문지로 제작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해 800부의 설문지 중 736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test, 분산분석(ANOVA), Duncan-tes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기준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측정변수에 대한 각 하위변수에 측정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척도, 그리고 분석방법으로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설문지 구성

요인	측정변수	문항 수	문항 번호	척도	분석방법
종속변수	출산의지				
개인적 요인	결혼가치관	7	I 1-7	5점 Likert 등간	빈도분석
	자녀가치관				기술통계분석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분산분석 (ANOVA)
	무자녀 소신				
가족적 요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3	II 1-3	5점 Likert 등간	Duncan test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경제적 요인	생활수준	6	III 1-6	5점 Likert 등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취업·고용의 불안				
	일, 가정 양립				
	주택소유 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				
정책적 요인	저출산 심각성	7	IV 1-7	5점 Likert 등간	Chi-square test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				
	출산의지 굳히기	1	V	명목	
인구통계학 적요인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	4	VI 1-4		
		30			

제 3 절 표본설계 및 분석방법

1. 표본의 특성

실증조사를 위한 표본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1~45세까지의 미·기혼 여성으로 전문직 여성, 어린이집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미취업 여성 8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8월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거쳐 본 연구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2까지 2주간에 걸쳐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600명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 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회수된 설문지 748부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736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5점 Likert인 등간척도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통계 분석에 적용하였다.

아래 [표 4-2]는 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2]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구분	내용
표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강남, 강북, 강서, 강동 거주 지역
표본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5세까지의 미·기혼 여성으로 전문직 여성 어린이집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미취업 여성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2까지 2주간 소요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총 800부 중 회수된 설문지 748부 미비한 설문지 12부 유효표본 736부
설문지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26일 예비조사 실시 50명 ■ 600명 직접 방문조사 / 200명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설문문항에 대한 표집 대상자인 통계 처리를 위한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응답 분석을 위해 먼저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독립변수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

인과 출산의지의 차이를 알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출산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와의 상호 집단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ylsis)으로 실시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처리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자료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표본의 일반화 특성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가설에 대한 검증	Chi-square test 분산분석(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사후 검증	Duncan test
상관관계 검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제 5 장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제 1 절 총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별 특성을 살펴보기 χ^2 -test를 통해 연령별, 학력수준, 희망자녀수 그리고 소득수준으로 분석결과는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1] 응답자의 구성

변수	조사항목	빈도(명)	비율 (%)	비고
연령	21-25세	193	26.22%	$df = 4$ $\chi^2 = 43.307$ $P=.001$
	26-30세	96	13.04%	
	31-35세	116	15.76%	
	36-40세	168	22.83%	
	41-45세	163	22.15%	
	전체	736	100.00%	
학력수준	고졸	219	29.76%	$df=3$ $\chi^2=84.858$ $P=.0001$
	전문대졸	188	25.54%	
	4년제 졸	247	33.56%	
	대학원졸 이상	82	11.14%	
	전체	736	100.00%	
희망자녀수	1명	159	21.60%	$df=3$ $\chi^2=362.076$ $P=.0001$
	2명	384	52.17%	
	3명	163	22.15%	
	4명	30	4.08%	
	전체	734	100.00%	
소득수준	100-200만원	116	15.76%	$df = 4$ $\chi^2 = 33.986$ $P=.0001$
	200-300만원	190	25.82%	
	300-400만원	181	24.59%	
	400-500만원	128	17.39%	
	500만원이상	121	16.44%	
	전체	736	100.00%	

*p<.05 **p<.01 ***p<.001

본 연구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위 검증을 위해 χ^2 테스트를 통해 문항을 살펴본 결과, χ^2 값이 연령별 $\chi^2 = 43.307$, $P=0.001(P<.01)$, 학력수준별 $\chi^2 = 84.858$, $P=0.0001(P<.001)$, 희망자녀수 $\chi^2 = 362.076$ $P=0.0001(P<.001)$, 소득수준 $\chi^2 = 33.986$, $P=0.0001(P<.001)$ 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인에서 유의수준이 .01, 나머지 .0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 독립변인으로 나타나 그 의미와 신뢰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의 대상은 20세 전후로부터 45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736명의 표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자 중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25대가 193명(26.22%), 26~30대 96명(13.04%), 31~35대 116명(15.76%), 36~40대 168명(22.83%), 41~45대 163명(22.15%)으로 전체 표본 중에서 20~25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본 연구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출산의지의 관심은 매우 저조한 결과로써 결혼적령시기와 무관함을 알 수 있었다($P<.01$).

다음으로 설문 응답자 중 736명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219명(29.76%), 전문대 졸 188명(25.54%), 4년제 졸 247명(33.56), 대학원 이상 82명(11.14%)으로 4년제 졸업자가 가장 많고 고졸, 전문대 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의 학력별 대학원 이상을 제외한 고른 분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이어 희망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이 159명(21.60%), 2명 384(52.17%), 3명 163명(22.15%), 4명 30명(4.08%)으로 응답자 중 희망자녀수는 2명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왔다($P<.001$).

마지막으로 응답자 736명에 대한 소득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200만원 116명(15.76%), 200~300만원 190명(25.82%), 300~400만원 181명(24.59%), 400~500만원 128명(17.38%), 500만원 이상 121명(16.44%)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이 200~300만원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다음 300~400만원대 순이었다($P<.001$).

제 2 절 출산의지의 영향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하고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다양한 분석기법에 의해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1. 가설 1의 분석검증결과

다음은 정부정책(4가지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 1.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결혼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자녀가치관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자아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4. 삶의 질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1-5. 무자녀 소신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표 5-2]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R ²	F
(상수)	1.43	10.56	.0001***		
결혼가치관	.12	4.83	.0001***		
자녀가치관	.16	6.21	.0001***		
자아성취욕구	.11	6.23	.0001***	.1322	34.79***
삶의 질	.04	1.63	.1035		
무자녀 소신	-.05	-1.84	.0663		

a. 종속변수: 출산의지, *p<.05 **p<.01 ***p<.001

위 [표 5-2]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R^2 은 .1322로 전체 분산 중 13.22%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전체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는 F값이 34.79로써 유의수준을 .001로 할 때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각 독립변수인 t값을 보면 결혼가치관($t=4.83$, $p<.001$), 자녀가치관($t=6.21$, $p<.001$), 자아성취욕구($t=6.23$, $p<.001$)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지 나타났다($p<.001$).

반면 삶의 질 및 무자녀 소신은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3.2%로 드러났다. 즉 개인적 요인에서 결혼가치관이 높을수록($B=.117$) 출산의지가 높아지며 마찬가지로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B=.157$) 역시 출산의지가 높으며 그리고 자아 성취 욕구가 높을수록($B=.114$)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가설 2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2.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자녀양육 과정에서 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출산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표 5-3]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R^2	F
(상수)	2.92	34.33	.0001***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00	-.05	.9576	.0050	2.90***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	-.04	-2.20	.0281*		

a. 종속변수: 출산의지, *p<.05 **p<.01 ***p<.001

위 [표 5-3]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가족적 요인의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가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R^2 은 .0050로 전체 분산 중 00.50%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전체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는 F값이 2.90으로써 유의수준을 .001로 할 때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또한 각 독립변수인 t값을 보면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은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의 t값을 보면 -2.2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지 나타났다($p<.05$).

결과적으로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0.5%이다. 즉 핵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수록($B=-.043$)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의 반응을 보였다.

3. 가설 3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3.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취업·고용의 불안이 인지될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3-3. 일·가정 양립이 해결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3-4. 직장생활 불이익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3-5. 양육·교육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표 5-4]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R^2	F
(상수)	2.45	17.80	.0001***		
생활수준	.08	2.41	.0160*		
취업·고용의 불안	.07	2.34	.0194*		
일·가정 양립	.04	1.56	.1185	.0170	3.95***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02	-.09	.3671		
양육·교육비 부담	-.05	-1.99	.0467*		

a. 종속변수: 출산의지, *p<.05 **p<.01 ***p<.001

위 [표 5-4]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의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R^2 은 .0170으로 전체 분산 중 01.70%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전체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는 F값이 3.95로써 유의수준을 .001로 할 때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각 독립변수인 t값을 보면 생활수준($t=2.41$, $p<.05$), 취업·고용의 불안 ($t=2.34$, $p<.05$), 양육·교육비 부담($t=-1.99$, $p<.05$)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지 나타났다($p<.05$).

반면 일·가정 양립,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은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7%이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B=.081$), 취업·고용의 불안을 인지할수록($B=.066$), 양육·교육비 부담이 낮을수록($B=-.045$)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분석이 나왔다.

4. 가설 4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4.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저출산 현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4-2.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4-3.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이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4.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5.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6. 보육서비스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가설 4-7.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표 5-5]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R^2	F
(상수)	1.44	10.53	.0001***		
저출산 심각성	-0.14	-.70	.4843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02	.94	.3457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00	-.16	.8744	.1735	34.18***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04	1.97	.0495*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09	5.56	.0001***		
보육서비스 지원	.05	2.27	.0053**		
믿을만한 보육시설	.21	11.56	.0001***		

a. 종속변수: 출산의지, * $p<.05$ ** $p<.01$ *** $p<.001$

위 [표 5-5]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종속변수인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R^2 은 .1735로 전체 분산 중 17.35% 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전체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는 F값이 34.18로 써 유의수준을 .001로 할 때 출산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t값의 검정은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은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의 t값을 보면 1.9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t=5.56$, $p<.01$), 보육서비스 지원($t=2.27$, $p<.001$), 믿을만한 보육시설($t=11.56$, $p<.001$)도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7.3%로 나타났으며,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B=.039$),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B=.087$),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B=.055$),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B=.211$)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로 인해 알 수 있었다.

위의 전체적인 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인 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아래 [표 5-6]는 다음과 같다.

[표 5-6] 정부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베타	t	P-value	R^2	F
(상수)	1.11	6.74	.0001***		
개인적 요인	.25	6.27	.0001***		
가족적 요인	-.10	-3.78	.0002***	.1426	47.52***
경제적 요인	-.03	-.65	.5156		
정책적 요인	.34	7.34	.0001***		

a. 종속변수: 출산의지, *p<.05 **p<.01 ***p<.001

위 [표 5-6]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R^2 은 .1426으로 전체 분산 중 14.26%가 설명되어졌음을 나타내고, 전체모형에 대한 F검정결과는 F값이 47.52로써 유의수준을 .001로 할 때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p<.001$).

또한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검정은 t값이 개인적 요인($t=6.27$, $p<.001$), 가족적 요인($t=-3.78$, $p<.001$), 정책적 요인($t=7.34$, $p<.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요인인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됨을 보여주고 있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이 높을수록($B=.253$), 정책적 요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높을수록($B=.340$) 출산의지가 높아지며, 가족적 요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가 낮을수록($B=-.105$)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출산의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4.3%이다.

5. 가설 5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5.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출산의지 굳히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가설 5-1. 출산의지 굳히기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2. 출산의지 굳히기는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3. 출산의지 굳히기는 희망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5-4. 출산의지 굳히기는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표 5-7] 출산의지 굳히기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결과 (%)

독립변수		양육의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 연장보육 (24시간)	남편의 가사·양육 협력	출산에 따른 사회적 이익	가사 도우미 지원	양육 도우미 지원	전체
연 령 별	21~25세	0 (00.00)	10 (1.36)	54 (7.34)	93 (12.64)	17 (2.31)	19 (2.58)	193 (26.22)
	25~30세	0 (00.00)	11 (1.49)	26 (4.48)	33 (4.45)	11 (1.49)	15 (2.04)	96 (13.04)
	31~36세	0 (00.00)	14 (2.72)	20 (3.26)	24 (3.26)	21 (2.99)	36 (4.89)	116 (15.76)
	36~40세	0 (00.00)	2 (2.85)	41 (5.57)	50 (6.79)	21 (2.85)	35 (4.76)	168 (22.83)
	41~45세	0 (00.00)	24 (3.26)	28 (3.80)	51 (6.93)	25 (3.40)	35 (4.76)	163 (22.15)
df=16 $\chi^2=59.614$ P=.0001							736 (100.00)	
학 력 별	고졸	0 (00.00)	11 (14.9)	54 (7.34)	82 (11.14)	29 (3.94)	43 (5.84)	219 (29.76)
	전문대 졸	0 (00.00)	26 93.53	44 (5.98)	68 (9.24)	17 (2.31)	33 (4.48)	188 (25.76)
	4년제 졸	0 (00.00)	40 (5.43)	58 (7.88)	74 (10.05)	35 (4.76)	40 (5.43)	247 (33.56)
	대학원 이상	0 (00.00)	3 (0.41)	13 (1.77)	27 (3.67)	15 (2.04)	24 (3.26)	82 (11.14)
df=12 $\chi^2=33.228$ P=0.0009							735 (100)	
희 망 자 녀 수	1 명	0 (00.00)	14 (1.90)	27 (3.67)	64 (8.70)	24 (3.26)	30 (4.08)	159 (21.60))
	2 명	0 (00.00)	50 (6.79)	92 (12.50)	113 (15.35)	49 (6.66)	80 (10.87)	384 (52.17))
	3 명	0 (00.00)	10 (1.36)	44 (5.98)	62 (8.42)	22 (2.99)	25 (3.40)	163 (22.15)
	4 명	0 (00.00)	6 (0.82)	6 (0.82)	12 (1.63)	1 (0.14)	5 (0.68)	30 (4.08)
df=12 $\chi^2=21.7482$ P=0.0404							736 (100.00)	
월 수 입	100~200 만원	0 (00.00)	9 (1.22)	29 (3.94)	42 (5.71)	16 (2.17)	20 (2.72)	116 (15.76)
	200~300 만원	0 (00.00)	17 (2.31)	43 (5.84)	69 (9.38)	25 (3.40)	36 (4.89)	190 (25.82)
	300~400 만원	0 (00.00)	21 (2.85)	39 (5.30)	70 (9.51)	20 (2.72)	31 (4.21)	181 (24.59)
	400~500 만원	0 (00.00)	18 (2.45)	38 (5.16)	40 (5.43)	15 (2.04)	17 (2.31)	128 (17.39)
	500 만원 이상	0 (00.00)	15 (2.04)	20 (2.72)	30 (4.08)	20 (2.72)	36 (4.89)	121 (16.44)
df=16 $\chi^2=25.1998$ P=0.0664							736 (100.00)	

*p<.05 **p<.01 ***p<.001

위 [표 5-7]은 출산의지를 굳히는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른 차이검증(Chi-square test)결과, 연령별 $\chi^2=59.614$, 학력 $\chi^2=33.228$ 의 P값이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한 수준의 응답이 나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에서 21-25세는 12.64%, 41-45세는 6.96%, 36-40세는 6.79%, 25-30세는 4.45%, 그리고 31-36세는 3.26%의 순으로 모두 출산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가장 높은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양육협력, 양육 도우미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의 경제적 지원과 비교하면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59.614$, $P<.001$).

학력별에서는 고졸이 11.14%, 4년대 졸이 10.05%, 전문대 졸이 9.24%, 대학원 이상이 3.67%의 순으로 역시 모두 출산에 따른 사회적 이익을 가장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남편의 가사양육협력, 양육 도우미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3.228$, $P<.001$).

희망자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이 15.35%, 1명이 8.70%, 3명이 8.42%, 4명이 1.63% 순으로 출산에 따라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만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갖는다는 가장 높은 반응으로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한 집단 간 차이에서는 유의수준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1.7482$, $P<.05$).

반면 소득수준에서는 300-400 만 원의 월 소득자가 9.51%, 200-300 만 원대가 9.38%, 100-200만 원대가 5.71%, 400-500만 원대가 5.43%, 그리고 500만 원대가 4.08%의 월 소득자 순에 의해서도 역시 출산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출산의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사회적 이익과 실질적 지원이 출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로 해석되어졌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출산의 의지를 굳히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에 전체 중 무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적 양육정책이 부실하다는 반증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의지를 굳히는데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가족의 도움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

형성이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가설에 의해 여성들의 가족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마찬가지로 가족 내 역할분담이 공평할수록, 그리고 가족 내 가사 분담을 나눌수록 출산의지가 높다는 분석결과에 의해 검증되었다.

6. 가설 6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6.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1.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표 5-8]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736				
pro>(r)under HO: RHO=0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요구	삶의 질
결혼가치관	1.00			
자녀가치관	.234**	1.00		
자아성취요구	.057	.195***	1.00	
삶의 질	.239***	.091**	-.156***	1.00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 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는 위 [표 5-8]과 같다.

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가치관과 삶의 질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239로 결혼가치관과 삶의 질이 23.9% 만큼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관계수의 값이 양수로써 결혼가치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의 질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났고, 자녀가치관과 삶의 질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91로 두 변수 간의 09.1%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성취욕구와 삶의 질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1.56으로 자아성취욕구와 삶의 질이 15.6%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고, 자아성취욕구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의 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두 변수 간에 선형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결혼가치관이나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이 중요해서 인생을 즐겨야한다는 자신의 삶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낮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아 성취 욕구를 높이는 것은 삶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인 관계인 것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개인적 가치관의 하위변수들과 삶의 질에 관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삶의 질과 변수 간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6-2.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표 5-9]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시설 간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736			
Pro>(r) under HO; Rho=0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1.00		
보육서비스 지원	.115***	1.00	
믿을만한 보육시설	.199***	.154***	1.00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 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는 위 [표 5-9]와 같다.

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과 믿을만한 보육 시설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199로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과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19.9% 만큼의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관계수의 값이 양수로써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은 매우 낮은 관계임이 나타났고, 보육서비스 지원과 믿을만한 보육 시설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115로 두 변수 간의 11.5%만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관계수의 값이 양수로써 보육서비스 지원이 높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과 보육서비스 지원이 높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은 매우 낮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출산장려정책의 하위변수들과 믿을만한 보육 시설에 관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모든 변수에서 믿을만한 보육시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 6-3.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5-10]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A	B	C	D	E	F	G	H	I	J	K
A	1.00
B	.667***	1.00
C	.609***	.714***	1.00
D	.500***	.520***	.510***	1.00
E	.521***	.518***	.557***	.530***	1.00
F	.266***	.242***	.300***	.187***	.325***	1.00
G	.037	.037	.037	.025	.443***	.044***	1.00
H	.202***	.237***	.255	.191***	.274***	.443***	.451***	1.00
I	.411***	.434***	.428***	.385***	.500***	.219***	.096***	.426***	1.00
J	.068	.069**	.140*	.048	.092	.333***	.518***	.383***	.155***	1.00
K	.083	.108**	.091	.087	.183***	.235***	.318***	.337***	.275***	.365***	1.00

- | | | |
|--------------------|---------------------------|-----------------------|
| A 취업·고용의 불안 | B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 C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
| D 양육·교육비 부담 | E 일·가정 양립 | F 삶의 질 |
| G 생활수준 | H 자아성취욕구 | I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
| J 무자녀 소신 | K 주택소유현황 | |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 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는 위 [표 5-10]과 같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출산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하위 변수들과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로써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통계적으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관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의 원인의 각 하위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고용의 불안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과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667로 두 변수 간이 66.7% 만큼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관련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과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714로 두 변수 간 71.4%만큼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과 일·가정 양립 간 상관계수의 값이 .557로 두 변수 간 55.7%만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양육·교육비 부담과 일·가정 양립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530으로 두 변수 간 53.0%만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과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500으로 두 변수 간 50.0%만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삶의 질과 자아성취욕구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443으로 두 변수 간 44.3%만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생활수준과 무자녀 소신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518로 두 변수 간 51.8%만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성취욕구와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426로 두 변수 간 42.6%만큼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와 주택소유현황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275로 두 변수 간 27.5%만큼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원인의 심각성인 하위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과 배우자 및 가족역할 분담과의 관계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 6-4.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5-11]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736				
	Pro>(r) under HO; Rho=0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	1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277***	1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196***	.289***	1	
저출산 심각성	-.050	.431***	.235***	1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 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는 위 [표 5-11]과 같다.

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와 저출산 심각성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50으로 두 변수 간이 05.5% 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관계수의 값이 음수로써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저출산의 심각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두 변수 간에 선형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과 저출산 심각성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431로 두 변수 간의 43.1%만큼의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이 높을수록 저출산 심각성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와 저출산 심각성에 있어서는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235로 두 변수 간 23.5%만큼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 출산장려정책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저출산 심각성은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출산장려정책 이용 경험이나 출산장려정책 인지도는 높을수록 저출산 심각성도 다소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저출산 심각성은 부정적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정책적 요인의 하위변수들과 저출산 심각성에 관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 변수 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가설 7의 분석검증결과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 대한 출산의지가 각각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가설 7.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연령이 어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 7-2.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7-3. 희망자녀수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7-3.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표 5-1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지 차이의 분산분석

		M	SD	Duncan	F	p
연령	21-25세(a)	3.01	0.66	a>b		
	26-30세(b)	2.78	0.79	c		
	31-35세(c)	2.72	0.72	d	8.39	.001***
	36-40세(d)	2.74	0.64			
	41-45세(e)	2.69	0.69	e		
학력	고졸(a)	2.78	0.69	a		
	전문대 졸(b)	2.84	0.66	b	5.78	.001**
	4년제 졸(c)	2.80	0.70	c>d		
	대학원 이상(d)	2.51	0.82			
희망 자녀 수	1명(a)	2.60	0.73	b		
	2명(b)	2.79	0.70	c	8.29	.001***
	3명(c)	2.91	0.62	d>a		
	4명 이상(d)	2.83	0.80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2.80	0.74			
	200-300만원 미만	2.77	0.73			
	300-400만원 미만	2.80	0.70	.20	.937	
	400-500만원 미만	2.78	0.64			
	500만원 이상	2.74	0.64			

*p<.05 **p<.01 ***p<.00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1$), 희망 자녀수($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위 [표 5-12]와 같다.

분석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조사 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지의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41-45세 집단이 2.68로 가장 낮은 출산의지를 보였고 21-25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령 집단별로 출산의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지의 평균이 높고 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

산의지 평균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P<.001$).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출산의지가 높게 조사된 집단은 전문대 졸 2.84 집단이었다. 고졸 학력자들의 출산의지 평균 2.78보다 대학원 이상이 평균 2.5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희망자녀수의 출산의지가 1명 2.91, 2명 2.79, 3명 2.91, 4명 이상 2.8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3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1명으로 나타났으며, 4명 이상도 출산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도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한다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수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 간 모두 출산의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21-25세의 출산의지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4년제 졸 이하가 대학원 이상의 2.51 보다 높았다. 희망자녀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가설 8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8.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방향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1.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개인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2.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4.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책방향의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가설 8-1.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개인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표 5-1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M	SD	Duncan	F	p
연령	21-25세	3.71	0.52			
	26-30세	3.65	0.68			
	31-35세	3.71	0.56		1.91	.107
	36-40세	3.78	0.53			
	41-45세	3.79	0.57			
학력	고졸	3.71	0.56			
	전문 대 졸	3.74	0.57		2.19	.087
	4년제 졸	3.81	0.51			
	대학원 이상	3.71	0.64			
희망 자녀수	1명(a)	3.40	0.61			
	2명(b)	3.76	0.50	c	42.37	.001***
	3명(c)	3.92	0.54	d >b>a		
	4명 이상(d)	3.96	0.56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a)	3.54	0.65	e >a		
	200-300만원 미만(b)	3.70	0.59	b		
	300-400만원 미만(c)	3.81	0.50	b	9.07	.001***
	400-500만원 미만(d)	3.78	0.53	c		
	500만원 이상(e)	3.86	0.48	d>a		

*p<.05 **p<.01 ***p<.001 독립변인: 결혼 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

위 [표 5-13]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희망 자녀수($p<.001$), 소득 수준($p<.001$)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조사 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21-25세 집단이 3.65로 가장 낮았고, 40-45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별로 개인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 등의 관심이 높은 결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개인적 요인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집단은 4년제 졸 3.81 집단이었다. 전문대 졸과 고졸 학력자는 3.71로 같은 평균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 1명 3.40, 2명 3.76, 3명 3.92, 4명 이상 3.96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 이상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P<.001$).

소득수준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3.54), 200-300만원 미만(3.70), 300-400만원 미만(3.81), 400-500만원 미만(3.78), 500만원 이상(3.86)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희망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개인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1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3.86으로 300만원 미만보다 높았으며, 200-500만원 미만은 200만원 미만보다 개인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8-2.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표 5-14]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M	SD	Duncan	F	p
연령	21-25세(a)	2.75	0.70			
	26-30세(b)	3.03	0.97	c>e		
	31-35세(c)	3.31	0.75	b>a	17.58	.001***
	36-40세(d)	3.22	0.79	d>b>a		
	41-45세(e)	3.13	0.80			
학력	고졸(a)	3.04	0.80	d>a		
	전문대 졸(b)	3.12	0.81	b	3.10	.026*
	4년제 졸(c)	3.11	0.77	c		
	대학원 이상(d)	3.31	0.95			
자녀수	1명	3.14	0.87			
	2명	3.08	0.79		31	.821
	3명	3.11	0.83			
	4명 이상	3.13	0.74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a)	3.17	0.84			
	200-300만원 미만(b)	3.00	0.81	a		
	300-400만원 미만(c)	3.15	0.82	d>b	2.51	.040*
	400-500만원 미만(d)	3.18	0.71			
	500만원 이상(e)	3.05	0.85			

*p<.05 **p<.01 ***p<.001

독립변수의 하위변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위 [표 5-14]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01$), 학력($p<.05$), 소득수준($p<.05$)에 따라 가족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조사 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의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21-25세 집단이 2.75로 가장 낮았고, 31-35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별로 가족적 요인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인 21-25세대가 가족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등에 관심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적 요인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집단은 대학원 이상 3.31, 전문대 졸 3.12, 4년제 졸 3.11, 고졸 학력자는 3.04 순의 집단이었다.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P<.0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가족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가 1명 3.14, 2명 3.08, 3명 3.11, 4명 이상 3.13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1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가족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3.17), 200~300만원 미만(3.00), 300~400만원 미만(3.15), 400~500만원 미만(3.18), 500만원 이상(3.05)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05$.).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31-35세의 가족적 요인이 3.31로 21-30세와 41-45세 보다 높았으며, 21-25세는 2.75로 가족적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의 가족적 요인은 3.31로 4년제 졸 이하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3.17, 400~500만원 미만은 3.18로 200~300만원 미만의 3.00 보다 가족적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가설 8-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표 5-15]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M	SD	Duncan	F	p
연령	21~25세(a)	2.85	0.48	b		
	26~30세(b)	2.97	0.69	c		
	31~35세(c)	3.06	0.53	d	4.25	.002**
	36~40세(d)	2.97	0.54	e>a		
	41~45세(e)	2.98	0.52			
학력	고졸(a)	2.89	0.49	d>a		
	전문대 졸(b)	2.93	0.54	b	18.78	.001***
	4년제 졸(c)	3.01	0.52	c		
	대학원 이상(d)	3.33	0.72	c>a		
자녀수	1명	2.94	0.61			
	2명	3.00	0.53		1.86	.135
	3명	2.91	0.54			
	4명 이상	2.96	0.49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a)	2.90	0.53			
	200~300만원 미만(b)	2.91	0.52	d		
	300~400만원 미만(c)	2.97	0.55	e>a	3.43	.009**
	400~500만원 미만(d)	3.04	0.52	b		
	500만원 이상(e)	3.06	0.61			

*p<.05 **p<.01 ***p<.001

독립변수의 하위변인: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주택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

위 [표 5-15]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주택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p<.01$), 학력($p<.001$), 소득 수준($p<.01$)에 따른 경제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1~25세 저연령 집단에서 가장 낮은 평균 2.85의 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31세~35

세의 연령의 집단에서는 평균 3.06의 비교적 높은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주택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01$).

학력수준에서의 집단 구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2.89), 전문대 졸(2.93), 4년제 졸(3.01), 대학원 이상(3.33)의 평균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하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1$).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가 1명 2.94, 2명 3.00, 3명 2.91, 4명 이상 2.96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이 결과로는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3명으로 저학력과 고학력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가족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2.90), 200~300만원 미만(2.91), 300~400만원 미만(2.97), 400~500만원 미만(3.04), 500만원 이상(3.06)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p<.01$).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연령은 26세 이상은 21~25세 보다 경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3.33으로 4년제 졸 이하보다 높았고, 4년제 졸은 3.01로 고졸의 2.89 보다 경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에서는 400만원 이상은 300만원 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8-4.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표 5-16]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책적 요인 차이의 분산분석

		M	SD	Duncan	F	p
연령	21-25세	3.37	0.46			
	26-30세	3.28	0.52			
	31-35세	3.34	0.44	.88	.473	
	36-40세	3.32	0.44			
	41-45세	3.31	0.55			
학력	고졸	3.30	0.44			
	전문대 졸	3.34	0.50		.97	.406
	4년제 졸	3.35	0.49			
	대학원 이상	3.37	0.56			
희망자녀수	1명(a)	3.11	0.50	d>a		
	2명(b)	3.35	0.43	b		
	3명(c)	3.41	0.50	b	20.19	.001***
	4명 이상(d)	3.48	0.51	c>a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3.31	0.51			
	200-300만원 미만	3.27	0.48			
	300-400만원 미만	3.36	0.47		2.15	.073
	400-500만원 미만	3.38	0.49			
	500만원 이상	3.34	0.44			

*p<.05 **p<.01 ***p<.001

독립변수의 하위변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

위 [표 5-16]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책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희망자녀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6-30세 연령 집단에서 가장

낮은 평균 3.28의 정책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1세-25세의 연령의 집단에서는 평균 3.37의 비교적 높은 정책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반응을 보였다.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의 집단 구분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3.30), 전문대 졸(3.34), 4년제 졸(3.35), 대학원 이상(3.37)의 평균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정책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가 1명 3.11, 2명 3.35, 3명 3.41, 4명 이상 3.48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결과로는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p<.001$).

소득수준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3.31), 200-300만원 미만(3.27), 300-400만원 미만(3.36), 400-500만원 미만(3.04), 500만원 이상(3.38)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희망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정책적 요인은 3.48로 2명 이하보다 높았으며, 2-3명은 희망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정책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가설의 요약과 해석

본 연구는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8개 영역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후 검증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석되었다.

1. 가설 1의 요약과 해석

가설 1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1, 1-2, 1-3, 1-4, 1-5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17]과 같이 요약·해석되었다.

[표 5-17] 가설 1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 설 내 용	베타	t	p	R^2	검증 결과
가설 1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결혼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1171	4.83	.0001***		채택
가설 1-2	자녀가치관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1565	6.21	.0001***		채택
가설 1-3	자아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1135	6.23	.0001***	.1322	채택
가설 1-4	삶의 질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443	1.63	.1035		기각
가설 1-5	무자녀 소신은 생각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544	-1.84	.0663		기각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의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개인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 삶의 질, 무자녀 소신이 출산의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결혼가치관은 표준화 B값 1.4289,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자녀가치관은 표준화 B값 .11715,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자아성취욕구는 표준화 B값 .1565,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출산의지에 가장 크게 정적(+) 관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1135로 11.35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질이 클수록 출산의지는 낮은 정적(+)관계임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자녀 소신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544로 05.44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부적(-) 관계임이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해당 귀무가설 1-1, 1-2, 1-3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과 무자녀 소신은 출산의지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설 1-4, 1-5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개인적인 가치관에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그리고 자아성취 욕구가 높을수록 출산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가설 2의 요약과 해석

가설 2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가족적 요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혁가족의 돌보미 유무가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 2-2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18]과 같다.

[표 5-18] 가설 2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 설 내 용	베타	t	p	R ²	검증 결과
가설 2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015	-.05	.9576	.0050	기각
가설 2-2	자녀 양육 과정에서 돌보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출산의지는 높아질 것이다.	-.0432	-2.20	.0281*		채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의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가족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 혁가족의 돌보미 유무가 출산의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00146 으로 0.0146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부적(-) 관계임이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혁가족의 돌보미 유무는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0432 로 0.0432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281로 출산의지에 낮은 부적(-) 관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인 해당 연구가설 2-2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혁가족의 돌보미 유무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해당 귀무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가족관계에서 혁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결과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가설 3의 요약과 해석

가설 3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인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1, 3-2, 3-3, 3-4, 3-5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19]와 같다.

[표 5-19] 가설 3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 설 내 용	베타	t	p	R^2	검증 결과
가설 3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806	2.41	.0160*		채택
가설 3-2	취업·고용의 불안이 인지될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0660	2.34	.0194*		채택
가설 3-3	일·가정 양립이 해결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361	1.56	.1185	.0170	기각
가설 3-4	직장생활 불이익이 클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0211	-.09	.3671		기각
가설 3-5	양육·교육비 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0454	-1.99	.0467*		채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의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생활수준이 표준화 B값 .0806로 08.06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160으로, 취업·고용의 불안이 표준화 B값 .0660으로 06.60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194로로 출산의지에 낮은 정적(+) 관계임을 나타냈고, 양육·교육비 부담이 표준화 B값 -.0454로 04.54만큼의 부적(-)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467로 출산의지에 미미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가정 양립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361로 03.61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낮은 정적(+) 관계임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불이익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211로 02.11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부적(-) 관계임이 나타나 유의

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양육·교육비 부담은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해당 귀무가설 3-1, 3-2, 3-5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과 직장생활 불이익은 출산의지에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설 3-3, 3-4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고용의 불안을 인지할수록 마찬가지로 양육·교육비 부담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가설 4의 요약과 해석

가설 4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의 하위변수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선택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4-1, 4-2, 4-3, 4-4, 4-5, 4-6, 4-7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0]과 같다.

[표 5-20] 가설 4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 설 내 용	베타	t	p	R^2	검증 결과
가설 4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저출산 현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1409	-1.84	.4843		기각
가설 4-2	출산장려정책 인지도가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0185	.94	.3457		기각
가설 4-3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이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0026	-.16	.8744		기각
가설 4-4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도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0392	1.97	.0495*	.1735	채택
가설 4-5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0872	5.56	.0001***		채택
가설 4-6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0547	2.27	.0053**		채택
가설 4-7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는 높을 것이다.	.2113	11.56	.0001***		채택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4의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정책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출산의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저출산 심각성은 표준화 B 값 -.1409로 14.09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낮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 출산의지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 인지도는 표준화 B 값 .0185로 01.85만큼의 영향을 미치

면서 정적(+) 관계임이 나타나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B값 -.0026로 00.26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부적(-) 관계임이 나타나 역시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표준화 B값 .2113로 21.13만큼의 정적(+) 관계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출산의지에 가장 크게 유의미한 차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표준화 B값 .0872로 .08.72만큼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출산의지에 낮은 정적(+) 관계임을 나타내어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서비스 지원이 표준화 B값 .0547로 05.47만큼의 정적(+) 관계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53로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표준화 B값 .0392로 03.92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495로 가장 낮은 정적(+) 관계의 유의미한 차이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은 출산의지에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설 4-1, 4-2, 4-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은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해당 귀무가설 4-4, 4-5, 4-6은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출산장력 정책 이용 만족이 높을수록, 탄력적 근무 여건 배려가 클수록,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전체적인 결과에 의하면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인 이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아래 [표 5-21]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정부정책 방향(1~4)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21] 가설 1~4의 전체적 분석검증결과

독립변수	베타	t	p	R^2	검증 결과
개인적 요인	.253	6.27	.0001***	.143	채택
가족적 요인	-.105	-3.78	.0002***		채택
경제적 요인	-.028	-.65	.516		기각
정책적 요인	.340	7.34	.0001***		채택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4‘의 ‘정부정책 방향(1-4)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정부정책 방향의 하위변인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개인적 요인은 표준화 B값 .253로 25.3만큼의 정적(+) 관계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가족적 요인은 표준화 B값 -.105로, 10.5만큼의 부적(-) 관계의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2로, 정책적 요인은 표준화 B값 -.028으로, 02.75만큼의 부적(-) 관계의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출산의지에 낮은 부적(-) 관계로 가장 크게 유의미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요인은 출산의지에 표준화 B값 -.028로 02.8만큼의 부적(-) 관계의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정부정책 방향(1-4)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해당 귀무가설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요인은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개인적 요인인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자아성취 욕구, 삶의 질과 투자, 무자녀 소신이 높을수록, 정책적 요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높을수록 출산 의지가 높아지며, 가족적 요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 분담,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가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 가설 5의 요약과 해석

가설 5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종속변수인 출산의지 굳히기에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5-1, 5-2, 5-3, 5-4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2]와 같다.

[표 5-22] 가설 5의 분석 검증 결과

가설	양육의 경제적 지원	보육 시설 연장 보육 (24h)	남편의 가사· 양육 협력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가사 도우미 지원	양육 도우미 지원	χ^2	검증 결과
가설 5								
가설5-1					21-25세 25-30세 31-36세 36-40세 41-45세	df=16 $\chi^2=59.614$ $P=.0001$		채택
가설5-2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	df=12 $\chi^2=33.228$ $P=.0009$		채택
가설5-3					1명 2명 3명 4명	df=12 $\chi^2=21.7482$ $P=.0404$		채택
가설5-4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df=16 $\chi^2=25.1998$ $P=.0664$		기각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5의 ‘출산의지 굳히기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의 하위변인인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교차 분석(Chi-square test) 결과, 연령대별은 모든 집단 간($\chi^2=59.614$)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1로 출산의지 굳히기에서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에이 연령에 따라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력별은 모든 집단 간 ($\chi^2=33.228$)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09로 출산의지 굳히기에서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에 역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희망자녀수도 모든 집단 간($\chi^2=21.7482$)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404로 출산의지 굳히기에서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소득수준은 집단 간 출산의지 굳히기에서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출산의지 굳히기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가정한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은 해당 귀무가설 5-1, 5-2, 5-3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어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설 5-4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출산의지를 굳히는데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가족의 협조와 정부의 지원이 사회적 인프라 형성을 위해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설에 의해 출산의지 굳히가는 연령, 학력별, 희망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를 나타냈다.

6. 가설 6의 요약과 해석

가설 6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변수 집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isis)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6-1, 6-2, 6-3, 6-4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3]과

같다.

가설 6.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1.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표 5-23】 가설 6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N=736 pro>(r)under HO: RHO=0	P	검증 결과
가설 6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6-1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p<.01 ***p<.001	채택
가설 6-2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p<.001	채택
가설 6-3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p<.001	채택
가설 6-4	출산장려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p<.001	채택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6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의 측정변수 집단 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 개인적 가치관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유의확률 $p<.01$, $p<.001$ 로 나타나 상호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시설과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유의확률 $p<.001$ 로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는 $p<.001$ 로 매우 높게 집단 간 차이를 보여 주었다.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심각성 간의 상관관계 역시 $p<.001$ 로 나타나 상호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결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를 가정한 하위변수의 집단 간 해당 귀무가설 6-1, 6-2, 6-3, 6-4는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어 모두 채택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한 출산의지는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과 무자녀 소신 그리고 양육·교육비 부담 등이 상호 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저출산의 심각성을 재인식 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7. 가설 7의 요약과 해석

가설 7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 대한 출산의지가 각각 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7-1, 7-2, 7-3, 7-4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4]와 같다.

[표 5-24] 가설 7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측정변수	SD	p	검증 결과
가설 7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1	연령이 어릴수록 출산의지가 높을 것이다.	21-25세 25-30세 31-36세 36-40세 41-45세	.66 .79 .72 .64 .69	.001	채택
가설 7-2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	.69 .66 .70 .82	.001	채택
가설 7-3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1명 2명 3명 4명	.73 .70 .62 .80	.001	채택
가설 7-4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을 것이다.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74 .73 .70 .64 .64	.937	기각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7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하위변인인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과 출산의지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결과, 연령에 있어서는 26-30세가 ($SD=.79$) 유의수준 .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1로 출산의지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이 ($SD=.82$) 유의수준 .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1로 출산의지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고, 희망자녀수에 있어서는 4명 이상이($SD=.80$) 유의수준 .01보다 작게 유의확률이 .001로 출산의지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반면, 소득수준은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은 해당 귀무가설 7-1, 7-2, 7-3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설 7-4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연령은 21-25세의 출산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학력은 4년제 졸 이하보다 대학원 이상이 높았다. 희망 자녀수는 4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도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한다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8. 가설 8의 요약과 해석

가설 8의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8-1, 8-2, 8-3, 8-4의 검증결과를 도표화하면 아래 [표 5-25] 와 같다.

[표 5-25] 가설 8의 분석검증결과

가설	가 설 내 용	F	p	측정 변수	검증 결과
가설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다.				
가설 8-1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개인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1.91	.107	연령	기각
		2.19	.087	학력	기각
		42.37	.001***	희망자녀수	채택
		9.07	.001***	소득수준	채택
가설 8-2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17.58	.001***	연령	채택
		3.10	.026*	학력	채택
		.31	.821	희망자녀수	기각
		2.51	.040*	소득수준	채택
가설 8-3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4.25	.002**	연령	채택
		18.78	.001***	학력	채택
		1.86	.135	희망자녀수	기각
		3.43	.009**	소득수준	채택
가설 8-4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책적 요인이 다를 것이다.	.88	.473	연령	기각
		.97	.406	학력	기각
		20.19	.001***	희망자녀수	채택
		2.15	.073	소득수준	기각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8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하위변인인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과 정부정책 방향(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에 대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결과, 개인적 요인은 연령(유의확률=.107)과 학력(유의확률=.08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희망자녀수(유의확률=.001)와 소득수준(유의확률=.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

가족적 요인은 연령(유의확률=.001), 학력(유의확률=.026), 소득수준(유의확률=.04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고, 희망자녀수(유의확

률=.82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경제적 요인은 연령(유의확률=.002), 학력(유의확률=.001), 소득수준(유의확률=.00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고, 희망자녀수(유의확률=.135)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적 요인은 연령(유의확률=.473), 학력(유의확률=.406), 소득수준(유의확률=.07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고, 희망자녀수(유의확률=.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검증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정부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가정한 가설 8-1, 8-2, 8-3, 8-4는 부분채택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정부정책 방향의 요인들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정부로부터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되길 바란다.

9.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연령, 학력, 희망자녀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자아 성취 욕구, 삶의 질 관련 가치관, 무자녀 소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희망자녀수,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적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조사 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개인적 요인의 연령에서는 21-25세대가 가장 낮은 집단이고, 가장 높은 집단이 40-45세 집단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별로 개인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령이 점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자아 성취 욕구, 삶의 질 관련 가치관, 무자녀 소신 등의 관심이 높은 결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이상의 집단

으로 구분하였을 때, 개인적 요인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집단은 4년제 졸 집단이었다. 전문대 졸과 고졸 학력자는 같은 평균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개인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 이상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300-4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200만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희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개인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1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에서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보다 높았으며, 200-500만원 미만은 200만원 미만보다 개인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 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라 가족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희망자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조사 응답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 요인의 연령에서는 가장 낮은 21-25세 집단이고, 31-35세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 집단별로 가족적 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인 21-25세대가 가족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배우자 및 가족역할 분담, 핵가족으로 돌보미 유무 등에 관심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적 요인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집단은 대학원 이상, 전문대 졸, 4년제 졸, 고졸 학력자 순의 집단이었다.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가족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가 1명, 4명 이상, 3명, 2명 순으로 집단 간은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1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가족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400~5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연령은 31~35세의 가족적 요인이 3.31로 21~30세와 41~45세 보다 높았으며, 21~25세는 2.75로 가족적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의 가족적 요인은 3.31로 4년제 졸 이 하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3.17, 400~500만원 미만은 3.18로 200~300만원 미만의 3.00 보다 가족적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주택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1~25세 저연령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31세~35세의 연령의 집단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취업·고용의 불안, 일·가정 양립, 주택소유현황,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 불이익, 양육·교육비 부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수준에서의 집단 구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 4년제 졸, 전문대 졸,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하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가 4명 이상, 1명, 2명, 3명의 순이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이결과로는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3명으로 저학력과 고학력의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가족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400~5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200-300만원 미만 간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연령은 26세 이상은 21-25세 보다 경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3.33으로 4년제 졸 이하보다 높았고, 4년제 졸은 3.01로 고졸의 2.89 보다 경제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수준에서는 400만원 이상은 300만원 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책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 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희망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하위영역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26-30세 연령 집단에서 가장 낮은 평균의 정책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1세-25세의 연령의 집단에서는 평균의 비교적 높은 정책적 요인의 하위변인인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 탄력적 근무 여건배려, 보육서비스 지원, 믿을만한 보육시설의 반응을 보였다.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의 집단 구분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 4년제 졸, 전문대 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희망자녀수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정책적 요인으로 살펴볼 때, 희망자녀수의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뚜렷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결과로는 가장 많은 희망자녀수는 4명이고, 가장 낮은 희망자녀수는 1명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300-4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 집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에 의하면 희망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정책적 요인은 3.48로 2명 이하보다 높았으며, 2-3명은 희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보다 정책적 요인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먼저 출산의지의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크게 범주화 한 뒤, 그 속성 변수들이 출산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로 경제적 접근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책 및 가치관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가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documentary research)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공청회 자료, 단행본, 연구 보고서, 학회지 논문, 세미나 자료,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 보도 자료, 저서, 그리고 통계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둘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 분석틀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추출한 출산의지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셋째, 이후 본 연구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넷째, 실증조사를 위한 표본 집단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1~45세까지의 미·기혼 여성으로 전문직 여성, 어린이집 학부모, 유치원 교사, 미취업 여성 등 대상으로 800명을 선정하였다. 그 기관 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22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600명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748부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736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5점 Likert인 등간척도와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분석도구로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독립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독립변수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과 출산의지의 차이를 알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출산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와의 상호 집단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은 종속 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의 경우 하위요인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자아성취욕구는 종속변수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과 투자 및 무자녀 소신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적 요인의 경우 핵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의 돌보미 유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및 가족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출산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경제적 요인의 경우 생활수준, 취업·고용의 불안, 양육·교육비 부담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일·가정 양립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고, 취업·고용의 불안을 인지할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지며, 마찬가지로 양육·교육비 부담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적 요인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이용만족이 높을수록, 탄력적 근무여건 배려가 클수록, 보육서비스 지원이 많을수록,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결과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출산 심각성,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출산장려정책 이용경험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결혼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자녀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팽배해져 예전과 달리 교육수준 향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출산기피현상이 일어나 저출산의 심각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정부

는 여성의 개인적 가치관과 출산율에 중요한 요인을 동시에 인식시켜야 할 뚜렷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가부장적 사회통념으로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의 도움이 수반되지 않는 한 여성의 출산의지를 굳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감소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요인이 내재 된 가정 분위기는 가임가능여성의 결혼과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웨덴의 경우처럼 가족정책과 가족수당제도의 전반적인 복지사회실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에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많은 가임가능여성이 수혜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소나기식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국가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출산 장려정책이라는 지적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에서 도출된 내용의 근거와 실증적 연구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미혼자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출산연령이 35세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의 추세이기 때문에 만혼으로 인한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에 관한 의학적 지식교육과 출산의 문제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녀가치관에 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산의지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부터 기인한 단기간에 변화되거나 정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치관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글짓기대회, 그리기 대회, 표어나 포스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펼쳤던 캠페인과 행사를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은 취업기혼자를 중심으로 기혼자에 대한 정책적 합의이다.

첫째, 출산 후 직장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기혼자에게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둘째아부터 출산의 연기 및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일과 자녀양육을 위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근무조건에 따라 맞춤식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믿을만한 보육시설에 대한 견해도 탄력근무와 마찬가지로 취업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인 자녀양육문제이다. 이로 인해 환경적으로나 교육내용, 그리고 교사의 질 등이 높은 위탁비용이 적절하며 믿을만한 공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취업여성의 경우 다양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시간적 배려와 조건들이 갖추어진 개인 맞춤식의 실질적인 보육제도와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보육 및 교육시설이 민간 시설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보육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민간시설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제도에 협조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가장 큰 고민이 자녀양육이다. 정부는 부모와 아기의 애착이 생기는 만 2세까지는 취업 기혼자에게 출퇴근 시차제,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한 탄력근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애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고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제도

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기업에서는 업무의 능률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과 자녀양육 어느 한 곳에도 몰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탄력근무에 협조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리감독과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탄력근무환경이 정착된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탄력근무제를 이용하면 자녀양육에 스트레스나 갈등이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탄력근무의 필요성이 높은 비율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현재 다자녀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지원을 두 자녀 가정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 방법이다. 현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2년 현재 1.24명인 것을 감안하면 2명의 자녀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현실적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사업평가』, 서울: 대한민국국회.
- 대한민국정부 (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한국보건 사회학회, 119-149.
- 권태환·김두섭 (2008), 『인구의 이해』(4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두섭 외 (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연구보고』, 18(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4.
- _____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27(2), 한국인구학회, 67-95.
- 김민주 (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2), 한국정책학회, 105-128.
- 김영순 (2010),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 체제」, 『사회보장연구원』, 26(1), 한국사회보장학회, 261-287.
- 김우수 (2008),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준석: 정책변화의 단절적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8(2), 경인행정학회, 178-179.
- 김옥암 (2000), 『인구경제학』, 경기: 공동체.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113-137.
- 김승권 (2003),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b Health Research』, Vol6, 한국모자보건학회, 1-2.
- _____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 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21.
- _____ (2005),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 _____ (2006),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6-2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홍배 외1(2008), 「인구구조 변화와 장래노동시장의 변화전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13(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33-147.
- 김한곤 (1993), 『한국출산력의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p.25.
- 김형준 (2008),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권과 노동권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3(1),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11-134.
- 노화준 (2006), 『정책 평가론』. 법문사. pp.74-79.
- 대한민국정부 (2008),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변화』.
- 마미정 (2007). 「서울·경기지역 맞벌이부부 출산의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_____ (2009), 「맞벌이 부부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민주노동연구소 (2006), 「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규명과 여성친화력 노동시장 정책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민희철 외 (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 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길진 (2007),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한국사회학회, 145-174.
- 박숙자 (2003),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여성연구』, 8권,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123.

- 방승희·김사현 (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방영이 (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은령·신효영 (2006), 「결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한국심리학회논문집, pp.326-327.
- 삼성경제연구소 (2002),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손승영 외 (2005),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담론 21』, 9(2): 45-274.
- _____ (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 논의」, 『지방시대 제 10권 1호 통권 26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7-243.
- 송다영 (2008),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경기가족여성』, 경기가족여성개발원, 34: 77-88.
- 신윤정 (2007),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여성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_____ (200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 2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3-134.
-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방은령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7(10), 대한가정학회, 123-136.
- 안윤숙·이상호 (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27-258.
- 안현미 (2010),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정책 성격에 관한 한국, 일본, 스웨덴, 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유진·박성준 (2010),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연세대경제연구소, 91-112.
- 유계숙 (2009), 「저출산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율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한국가족관계학회, 169-189.
- 윤경애 (2006), 「한국·독일·스웨덴의 여성·가족정책」, 『대한가정학회지』, 47(19), 대한가정학회, 11.
- 윤소영 (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한국가정관리학회 159-166.
- 윤은숙 (2007),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p.57.
- _____ (2011).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논문.
- 이명석 외 (2012),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한국행정연구원, 162.
- 이미란 (2007),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거주 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출산장려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한국가족복지학회, 75-96.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서울: 한국.
- _____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5-140.
- _____ (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사회복지』, 173: 42-55.
- _____ 외(2010),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 이소영 (2008),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연주 (2003), 「결혼 및 출산 등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2-32.
- _____ (2005). 「Genderlife time socioeconomic environments and health

- among the - 183 -elderly」, 『인구와 사회』,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원.
- _____. 김재일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 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5(1), 경희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61-90.
- 이인순 (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합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한국사회복지 학회, 67-90.
- 이정원 (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옥 (2011), 「한국여성의 출산형태 결정요인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온기수 외 3인 (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장영식·고경환·류시원·이정우·감나연 (2009).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0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혜경·송치선 (2005),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 _____. (2009), 「인구와 인구정책」, 『사회과학연구』,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57(1): 29-45.
- 정성호 (2009),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향후과제」, 『사회과학 연구』, 48(2).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22. .
- 조남훈 외 (2007),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명덕 (2008), 「저출산·고령사회 원인 및 경제적 효과분석」, 『사회 보장연구』, 26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1-31
- _____. (2010), 「저출산 고령사회 원인 및 경제적 효과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한국사회보장학회, 1-31.

- 조윤영 (2007),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174, 한국개발연구원.
- 조병구·조윤영·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채구묵 (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337-361.
- 최숙희·김정우(2006).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EO Information』, 삼성연구소.
- 홍승아 (2005), 「복지국가 모성정책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외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_____·장혜경 (2006). 「한국의 부모휴가 정착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하연희·문맹재 (2007).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75-1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2009), 「세계 최저 출산율 대한민국,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월간신용경제』, 5월호.
- 한유미·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 참여」, 『한국생활학회지』, 139(11), 한국생활과학회, 29-40.
- 허만형 · 이정철(2011),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387-409.
- 국회예산정책처 (2007).
- 기획경제부 (2009), 2011년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
- 저출산·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2005).

- 보건복지부 (2007).
- 보건복지부 (2010), 임신·출산·육아 포털의 출산지원시책.
- 보건복지부 (2011a).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0), 2011-2015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
2010-정책개발-013
- 인구보건복지협회 (2004)
- 입법정책 연구회 (2006)
- 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 _____ (2005), 「장래인구추계」 .
- _____ (2008). 「장래인구추계」 .
- _____ (2008), 「KOSIS 자료」 .
- _____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 _____ (2009), 「인구동향조사」 .
- _____ (2010), 「인구동향조사」 .
- _____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_____ (2010), 「사회조사」 .
- _____ (2011). 「2010출산통계 잠정결과」
- 정책개발 보고서 (2010).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3~V2006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
- 현대경제연구원 (2010).

국외문헌

- Andersson, G. (2002), Fertility Developments in Norway and Swe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6(4): 119–135.
- Andersson, A, (2003), Toward a European childcare regime, *Paper prepared for the 4th Annual ESPA*.
- _____ (2005),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elected countries that encourage childbirth: The case of Sweden,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2005-005,
- Averett, S. and L. Whittington, (2001), Does Maternity leave induce Birth?, *Southern Economic Journal* 68(2): 403–417.
- Barker, D., and C. J. Cameron (2000), Spirit of capitalism: Religious doctrine of values and economic attitude constructs. *Political Behavior* 22 (1): 1–27. 20 Urban Affairs Review.
- Barmby, T. and Cigno, T. (1988), A sequential probability model of fertility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 31–51.
- Becker G. (1960), "An Economics Analysis of Fertility", *Demographic and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NBER conference Series, Princeton,
- _____ (1974), A Theory of Marriage Part II,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4): 511–526.
- Blau, D. M. & Robins, P. K.(2000),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2), 287–299.
- Bonodi, G.(2008), The Impact of Social Polity on fertility: Evidence from Switzerlan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ty*, 18(1): 64–78.

- Brouillette et al.(1993),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fertility behavior in Quebec. *and Development Review*, 19(3): 467–496, Canadian Public Policy, 19(3): 260–278.
- Caldwell, J.C.(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 Chenais, J. C.(1989), La politique française depuis 1914.(dirige par J. Dupquier) Historie de population française, Vol 4-De 1914 *Nos jours, Paris*, P.U.P.
- Chevalier, A. and & Viitanen, T.(2002), " The Causality Between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Childcare," *Applied Economics Letters*, 9(14).
- d'Addio, A and M. d'Ercore,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uclos, E., Lefebvre, P., & Merrigan, P. (2001).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s: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 Fluctuations and Employment, *Working Paper* no. 136.
- Dumont, W.(ed.)(1990), Family Polity in EEC Countries, Brussels: Commissipn of the Commissip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Duvander , A. Z. & Andersson, G.(2005),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earing, *MPIDR working paper* 2005-013.
- Erimisch, J. (1988). The economic analysis of birthrate dynamics in Brita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4): 563–576.
- Gauthier, A. H. and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 An econom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95–306.
- Heer, David M, (1996),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3(2).
- Hochschild, A. R.(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Ingelhardt, Henriette, Tomas Koegel and Alexi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109–120.
- Joelle E. Sleebos,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Kalwij, Adriaan (2010), The impact family policy expenditure on fertility in western Europe, *Demography*, 47(2): 503–519.
- Kohle, H.P, Billari, F.C. and Ortega, J.A,(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alive, R. and J. Zweimuler (2005), Does Parenthood leave Affect Fertility and Return-to-Work?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 Laroque, G. and Salanié, B. (2008),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IZA Discussion Paper*.
- Leibenstein, Harvey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Literature. 12(2).
-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3): 593–555.
- Mincer, J. and Polachek, S. (1974),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 Muller, E.(1976), "The Economic Value of Children in Peasant Agriculture", in Ridle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The

- Search for selective Interventions, Johns Hokins University Press, pp.99–1532.
- Neyer, G.(2003), family pol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MPIDR working paper*, WP 2003-021,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Notestein, F.(1953), Economic Problems of Population Chang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_____ (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1, Australia, Denmark and the Netherlands.
- _____ (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2, Austria, Ireland and Japen, OECD.
- _____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ume 3, New Zealand, Portugal and Switzerland, OECD.
- _____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Paris: OECD
- Rindfuss, R. R. and Brewster, K. L.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evelopment Review*. 22(Suppl.). 258–289.
- Roanld Ingelhar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ltz, T. W. (1982),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Press.
- Sleebos, J. E. (2003),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t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Paris:OECD.
- Sundstrom, M. (1991), Sweden: Supporting Work, Family, and Gender Equality.
- Whittington, L. A. (1992), Taxes and the family: The impact of the of the tax exemption for dependents on marital fertility, *Demography* 29(2): 215-226.
- Williams, Joan (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4-84.
- Zhang et al. (1994), The effect of tax-transfer policies on fertility in Canada,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1): 181-201.
- 山口一男, 2008; Work Life Balance and Low Fertilit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옮김.

인터넷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여성부: <http://moget.go.kr>
- 통계청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www.agalove.org
- <http://100.never.com>

【부 록】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박영애입니다.

본 설문은 최근 국가적으로 현안이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개인의 생각과 환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소중한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지도교수 : 이 종 수

연구자 : 박 영 애

I.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개인적 요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내용	응답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이 못했던 것을 성취해 대리만족하고자 한다.					
3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4	나의 인생은 매우 중요하기에 내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5	귀하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보다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자녀가 있으면 사회적 지위나 자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7	자녀가 있어도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자녀도 상관없다.					

II.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가족적 요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내용	응답척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양육을 배우자가 공동분담하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출산을 꺼려하는 원인이다.					
2	가족들이 역할 분담을 하지 않고 여성에게 많은 것을 부여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3	핵가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III.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내용	응답척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부 위주의 삶을 살고자하는 개인의 식이 원인이다(생활수준)					
2	자녀양육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은 부담스럽다. (기회비용이란 자녀양육비 외의 또 다른 비용으로 자녀양육으로 지출되는 비용)				
3	취업 • 고용이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 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다.				
4	일 • 가정 양립으로 가정생활 균형이 어려운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5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의 우려가 저출산의 원인이다.				
6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스러 운 것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IV. 다음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정책적 요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질문 내용	응답척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과 보육료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3	귀하는 출산의료비 지원 정부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4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만족하십니까?				
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꼭 필요하다.				
6	정부가 출산료와 보육료를 더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7	귀하는 집 근처에 자녀를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V. 귀하는 출산의지를 굳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② 보육시설의 연장 보육(24시간)
- ③ 남편의 가사 및 양육의 협력
- ④ 출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 ⑤ 가사 도우미 지원
- ⑥ 양육 도우미 지원

VII. 다음은 인구통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 ① 21세~25세
- ② 26세~30세
- ③ 31세~35세
- ④ 36세~40세
- ⑤ 41세~45세

2. 귀하의 교육수준은?

- ① 고졸
- ② 전문대 졸
- ③ 4년제 졸
- ④ 대학원 졸 이상

3. 귀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 ① 1 명
- ② 2 명
- ③ 3 명
- ④ 4 명 이상

4.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 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③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④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⑤ 500만 원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서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Park, Young-Ae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research, as a research for effective element of delivery will, is focused on the direction of policy about delivery will in realistic conditions discussing its execution and four government policy elements, such as personal, family-oriented, economical and political elements. This research designed research model and established hypothesis with emphasis of major variable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case of personal elements, sub elements as marriage value, children value and desire for self achievement have influences over delivery will that is a dependent variable. On the other side, quality of life, investment and belief in no child have no influences over the will with a null hypothesis at significance level.

Secondly, in case of family oriented element, as the will gets lower with no child care person availability by nuclear family trend, existence

of child care person has influence over the delivery will. However, partner and family role share did not affect the will.

Thirdly, in case of economical element, loads from level of life style, employment and education expense affected delivery will while dual stance of work and family did not affect on the will with a null hypothesis at significance level.

Fourthly, in case of political element, as the satisfaction rate for delivery support policy is higher, as flexible work condition consideration is bigger, as many child care service support is available and as more child care facility is available, the will resulted high as a reaction to them. On the other side, seriousness of low delivery rate, awareness of delivery support policy and experience of the policy did not affect the will with a null hypotheses ay significance level.

Implications based on research as above can be provided as follows.

Firstly, rapidly changing social trend weakened marriage value and this fact generated marriage avoid phenomenon and child avoid phenomenon spreads. Increase of female education resulted in increase of age of marriage as well as female economic activities. This brought in delivery avoid phenomenon thus resulting in lower delivery phenomenon. Government should bring up solutions to persuade female personal value and important element of delivery rate at the same time.

Secondly, patriarchal social idea weighting household labor to female traditionally pressures working female with double burden as dual stance of work and family worsen the delivery will. Such atmosphere within a family generates female with an ability to get pregnancy to

avoid marriage and delivery. Government should exercise wide welfare social realization such as family policy and family benefit policy just like Swedish government.

Thirdly, unstable economic situation raised low income rate, expenses for education and unemployment rate and it is affecting delivery rate.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and promote effectively to achieve short policy effect with limited resources.

Fourthly, the research has pointed out the delivery support policy as most ineffective policy among government polic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olicy to recover delivery rate must be reviewed continuously and to be exercised immediately.

Political implication based on result of theoretical base and positive research can be provided as follows.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unmarried are followed.

First, as delivery age is increased up to 35, a fact that late marriage leads slow recovery of mother should be emphasized with medical knowledge education regarding child's health and delivery problems.

Second, as a long running policy, detailed program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child value are required urgently. Such values can not be changed by trend nor be recognized. Thus, solution to change the idea with stance of such value as a long run plan is required.

Third, for a change of value regarding marriage and having a child,

special incentive for delivery support policy from primary school student to adult is required. Various solutions to refresh interests to encourage delivery are required.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working and married female are followed.

First, government must try hard to avoid carrier cutting experience for working and married female returning from the delivery. Political solution is required especially to avoid delay or giving up of having second child.

Second, to ease lack of child care facility to secure work and child care, custom child care facilities satisfying personal working status are required. As most of facilities are operated in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must prohibit it to be transferred to public facilities by political method.

Third, the biggest problem after the delivery is the child care. Government should provide comfortable and flexibl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flexible work hour system, part time and working from home.

Four, it will be a realistic solution to shift policy support for multi child family to dual child family to improve delivery rate. Support policy with encouraging two children is realistic and effective.

Key Words : Delivery will, Delivery support policy, Personal, Family-oriented, Economical, Political elements.